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2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박복순 · 박선영 · 송효진 · 송치선 · 차혜령

KW  
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

연구책임자 : 박 복 순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 선 영 (본원 선임연구위원)  
송 효 진 (본원 연구위원)  
송 치 선 (본원 전문연구위원)  
차 혜 령 (공감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발 간 사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 관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 등 많은 입법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의 여성 집중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정체와 변화하지 않는 M자 곡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여성과 아동, 돌봄노동의 사회화 등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2012년 5월 30일에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여성국회의원을 배출한 만큼 제19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큼니다. 이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입법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안하여 제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활동이 성인지적으로 풍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과제가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서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자문과 논평을 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9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
3. 기대 효과 .....	5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5
II.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현황 및 평가 .....	7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	9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	12
III.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및 방향 .....	45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	47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	63
IV.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	69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71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	88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98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101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	106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132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137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38
■ 참고문헌 .....	143
■ Abstract .....	147

## 표 목 차

<표 II-1>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규모 .....	9
<표 II-2>	주제별 16·17·18대 여성·가족 관련 입법규모 .....	10
<표 II-3>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의결법안 현황 .....	11
<표 III-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	48
<표 III-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율 .....	48
<표 III-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	51
<표 III-4>	공직 내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	56
<표 III-5>	가구구성별 추계가구 .....	57
<표 III-6>	외국인과의 혼인 .....	59
<표 III-7>	국제결혼건수-성별비교 .....	60
<표 III-8>	아동보육상태별 아동인구(2010) .....	61
<표 III-9>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시설급여: 2008~2010 .....	62
<표 III-10>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재가서비스: 2008~2010 .....	62

## 그림 목 차

<그림 Ⅲ-1> OECD 주요 국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 .....	49
<그림 Ⅲ-2> 성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1~2012년) .....	50
<그림 Ⅲ-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2년 3월) .....	52
<그림 Ⅲ-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53
<그림 Ⅲ-5>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54
<그림 Ⅲ-6> 남녀대학진학률 추이 .....	55
<그림 Ⅲ-7>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비율 .....	55
<그림 Ⅲ-8> 다문화가족 인구 추정치 .....	60

#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기대 효과	5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법은 모든 정책의 근거로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활동 또한 여성·가족 관련 정책의 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된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여 만들어지는데,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과 의결권을 동시에 가짐으로써 입법활동의 중추역할을 수행한다. 부처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상대적으로 복잡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부보다는 수월하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점과 국회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들어 의원입법의 발의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 의원입법 발의건수는 12,147건(12. 2. 22 기준)으로 제16대 국회의 1,912건, 제17대 국회의 6,387건에 비해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로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19대 국회가 2012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들은 회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본 과제는 제19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되어 논의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했던 젠더 관련 주요 법률안, 제18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새로이 개척된 것으로 제19대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연계가 필요한 사항,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여성정책 총선 공약, 시민사회의 정책 제안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1년 7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과제를 제안함으로써 제19대 국회에서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활동이 내용적으로 풍부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하는



#### 4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다루어진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제19대 국회가 놓인 입법 환경을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성별 격차와 가족구조의 변동 등으로 분석한 후,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활동시 견지해야 할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Ⅲ장에서의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에 맞추어 제19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를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분야 입법동향 및 제19대 총선에서의 각 당의 여성·가족 분야 공약 및 여성단체의 입법제안을 종합하여 제(개)정 배경 및 제(개)정 방향, 그리고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된 개정안을 예시하고자 한다.

## 나.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제 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의 연구물 및 각종 정책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 2)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진 내에서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20개 입법 과제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입법조사처와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젠더와 입법포럼(2012. 7. 19.)에서 발표함으로써, 여성·가족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 3. 기대 효과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입법 활동의 장인 국회에서의 포럼 개최로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관심을 끌어냈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제19대 국회가 출범한 현 시점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가 계속되는 4년 내내 여성·가족 입법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여성·가족 분야 현안의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 다루는 여성·가족 입법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 법률과 여성가족위원회가 관련 위원회가 되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국회법 제36조와 제37조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등을 직무를 하고,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회부해 온 경우 및 여성가족위원회가 회부요청을 하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는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법 제83조).

따라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의 근간이 되는 여성가족부의 사무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입법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여성가족부 직제 제2조),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2국 1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입법을 남녀차별 개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가족 복지증진,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성 주류화 추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제19대 국회가 출범(2012. 5. 30)하였고, 이미 활

발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과제의 상당 부분이 실제 입법안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개)정 배경 및 제(개)정 방향은 같지만 구체적인 입법안에서 상이한 것들이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하나의 예시이며, 다양한 개정방안이 있을 수 있음에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아무쪼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가 개정안까지는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개정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서 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또한 제Ⅱ장부터의 서술 방식은 개조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통일성이 없어 보이지만, 간략한 설명을 통한 축약 강조와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해둔다.

또한 제18대 국회 회기 중에 정부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본문의 기술 속에 시점의 명확한 구별을 하지 않고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라고 표기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0년 3월 12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여성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이해하고, 그 이후는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로 이해하면 된다.

## II

#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현황 및 평가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9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12

이 장에서는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와 주요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제18대 국회에 이어 제19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제18대 국회의 여성·가족 입법 현황

- 제18대 국회(2008. 5. 30.~2012. 5. 29.)에서 여성·가족 관련하여 심의된 법률안은 687건으로 이 중 13%인 95건이 의결됨.
-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 수와 비교하면 13% 감소한 규모임(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수는 109건<sup>1)</sup>임).

〈표 Ⅱ-1〉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규모

발의건수	의결건수	의결비율
687*	95**	13.0%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과 가족」 9호, 「젠더와 입법」 10~13호,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14호~17호 참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2)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참조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8),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참조

〈표 II-2〉 주제별 16·17·18대 여성·가족 관련 입법규모

제16대		제17대		제18대	
양성평등확산과 남녀차별개선	12	남녀차별개선	15	남녀차별개선	5
여성인권향상	7	여성인권향상 및 건강증진	29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39
-	-	취약계층 여성·가족 복지증진	13	여성·가족 복지증진	19
보육	3	돌봄노동의 사회화	8	돌봄노동의 사회화	8
모성보호	9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22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12
사회참여 확대	10	사회참여 확대	11	사회참여 확대	5
-	-	성인지 정책 추진	4	성 주류화 추진	6
여성정책체계의 강화	6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6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2
-	-	기타	1	-	-
계	47	계(증가율)	109(△ 132%)	계(증가율)	96(▽ 13%)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4, 2008, 2012)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참조

- 제18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남녀차별 개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가족 복지증진,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사회참여 확대, 성 주류화 추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로 구분할 수 있음<sup>2)</sup>.
- 제18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법 개정이 이뤄진 분야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39건, 40%),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20건, 20.0%), 여성·가족 복지증진(19건, 19%) 순으로 나타남.

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2),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구분 참조

〈표 Ⅱ-3〉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의결법안 현황

분 야	의결 법안수	비율 (%)	해당 법명(개정회수)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39	40.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 경범죄처벌법(1) 교육공무원법(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1) 군형법(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사립학교법(1) 사회복지사업법(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 유아교육법(1) 의료법(1) 장애인복지법(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초·중등교육법(2) 출입국관리법(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 형법(1)
여성·가족 복지증진	19	19.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긴급복지지원법(1) 다문화가족지원법(2) 모자보건법(2) 사회보장기본법(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 조세특례제한법(1) 한부모가족지원법(3)

12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분 야	의결 법안수	비율 (%)	해당 법령(개정회수)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	20	20.0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1) 건강가정기본법(1) 고용보험법(1) 교육공무원법(2) 국가공무원법(1) 군인사법(1) 근로기준법(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 사립학교법(1) 지방공무원법(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 아이돌봄지원법(1) 영유아보육법(4) 유아교육법(2)
남녀차별 개선	5	5.0	공무원연금법(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 공직자윤리법(1) 군행형법(1) 병역법(1)
사회참여 확대	5	5.0	공직선거법(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1)
성 주류화 추진	6	6.0	성별영향분석평가법(1) 국가재정법(1) 국가회계법(1) 국제개발협력기본법(1) 지방재정법(1) 통계법(1)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2	2.0	국회법(1) 정부조직법(1)
계	96	100	

## 2. 제18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분야별 성과 및 평가

- ☐ 제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및 타 위원회에서 여성·가족 관련으로 이루어진 개정 내용 및 그에 대한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대 국회에서 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4월<sup>3)</sup> 개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떠나는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가정폭력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접수, 상담, 관련 기관·시설로의 연계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2009년 5월 8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09년 12월 개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입소 피해자들에게 상담, 치료,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생계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경우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특히 동반 아동의 보육비, 학비, 급식비 등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동반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교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함(2010년 2월 4일 공포, 1년 후 시행).
  - 2010년 4월 개정에서는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

3) 이하 연월의 표기는 의결일을 기준으로 한 것임.

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함(2010년 5월 1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는 의식이 높고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피해자의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2012년 2월 1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6월 개정에서는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긴급 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2011년 7월 25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이 법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재발방지를 도모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자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대 국회에서 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12월 개정에서는 여성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지원시설과 상담소에서 수행하는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2010년 2월 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3월 개정에서는 성접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성접대 실태조사 자료를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2011년 3월 30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을 해당 사업장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여 계속되는 성매매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8대 국회에서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분리 입법되어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3월에는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성폭력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을 규정하여 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함(2010년 4월 15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

- 2011년 3월 개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사건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구성원에게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도 상담소나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긴급 구조 필요 시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함(2011년 3월 30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국가가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2011년 3월 30일 공포, 2011년 10월 1일 시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8대 국회에서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독자적으로 분리 입법되어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3월에는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기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 입법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상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함(2010년 4월 15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
  - 2011년 4월 개정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려함(2011년 4월 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0월 개정에서는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2011년 11월 17일 공포·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고지 대상에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을 추가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함(2012년 1월 17일 공포, 2012년 3월 16일 시행).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6월 제명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가 수치심과 거부감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함. 이 법은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성욕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 주사를 주기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치료요법과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아동 성폭력범의 재범율을 현저히 낮춘 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2010년 7월 23일 공포, 1년 뒤 시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3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로 변경됨.

- 2009년 4월 개정에서는 제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함(2009년 6월 9일 공포, 2010년 1월 1일 시행).
- 2010년 3월 개정에서는 성범죄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음주나 약물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며, 진술녹화제도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를 도입하여 수사·재판 과정 및 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규정을 보완·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2010년 4월 15일 공포·시행).
- 2011년 8월 개정에서는 2010년 3월 개정 이후 발의된 법안 20건에 대한 대안으로 통과되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음란물의 유통을 방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 선임의 특례를 정하며, 성매매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2011년 9월 15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추가하고,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비친고죄화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추가하며,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률

- 「교육공무원법」은 2011년 4월 개정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 관련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2012년 5월 19일 공포·시행).
- 「사립학교법」은 2011년 4월 개정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원의 성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재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2011년 5월 19일 공포·시행).
- 「유아교육법」은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11년 4월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유치원의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2011년 5월 19일 공포·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맞추어 유치원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함(2012년 1월 26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초·중등교육법」은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11년 4월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등으로 재직 중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 또는 계약제교원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2011년 5월 19일 공포·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사 등도 이를 적용받도록 함(2012년 1월 29일 공포·시행).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2012년 1월 26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2차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할 필요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함(2012년 1월 17일 공포, 2012년 7월 1일 시행).

- 「군형법」은 2009년 9월 개정에서 여군 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죄에 대하여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2009년 11월 2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음란물 유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형법」상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그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를 중대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수수행위를 처벌하고, 몰수하도록 함(2012년 1월 17일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9월 개정에서는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게 함(2009년 11월 2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 성범죄를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
- 「출입국관리법」은 2011년 3월 개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

인이 가정폭력으로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만료 후에도 피해회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2011년 4월 5일 공포·시행).

- 「형법」은 2010년 3월 개정에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향이 있는 자는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2010년 4월 15일 공포·시행).

#### 라)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함(2012년 1월 26일 공포, 2012년 8월 5일 시행).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4월 개정에서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수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수색·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2011년 8월 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의료법」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태아성별고지를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

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 7. 31, 2005헌바90 등)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함(2009년 12월 31일 공포·시행).

- 「장애인복지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2012년 1월 2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 「경범죄처벌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새롭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를 경범죄로 추가하여 시대적인 변화를 법에 반영함. 이로써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 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됨(2012년 3월 21일 공포, 1년 후부터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분야의 제18대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임.
  - 가정폭력에 대한 입법 경향은 시설평가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동반 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피해자 긴급구조를 위한 경찰관의 동행, 현장출입조사권, 긴급임시조치권의 부여로 경찰관의 초기 대응에서의 문제를 시정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중한 처벌 및 피하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으로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함.

- 또한 성폭력에 대한 입법 경향도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배상명령제, 국민참여재판 회피 권리 보장, 아동청소년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및 신상정보공개와 성충동 약물치료의 도입으로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두드러지고, 특히 일반 성폭력 피해자보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대응이 부각됨.
- 가정폭력과 성폭력 방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반면, 성매매에 대한 입법경향은 시설평가 및 보수교육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고 성접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식품접객업 영업자에 대한 상담소 업무 및 연락처, 해당 법률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 성매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에 그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성폭력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임용)제한 규정 마련과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 및 취업제한 규정 마련이 두드러짐.

-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분야에서 제18대 국회에서 입법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형법의 친고죄 폐지 및 강간 객체의 확대 및 강간 개념의 확대, 성매매 개념 확대,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 비준 및 이행을 위해 인신매매 관련 규정의 신설 혹은 제정에 관한 것 등이 있음.

## 나. 여성·가족 복지 증진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 「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됨.
  - 2010년 4월 개정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결혼중개 계약 이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결혼중개 관행을 개선하고, 예치금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 및 등록 업무를 시·군·구로 일원화하는 등 결혼중개업의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2010년 5월 1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신상정보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성매매 알선·강요,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기준과 공시제도를 신설하고, 부당하거나 무등록 업체의 과장된 결혼중개 광고를 금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추진 시 장애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2010년 2월 4일 공포·시행).
  
-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음.
  - 2011년 3월 개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더욱 쉽게 함(2011년 4월 4일 공

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등록 정보 및 귀화허가 신청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결혼이민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세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2010년 4월 개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부모가족의 입소보호 수탁을 거부한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여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07. 11. 29. 2005헌가10)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2010년 5월 17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2011년 3월 개정에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책임과 교육에서의 권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삭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행정보고의 삭제와 전자보고의 도입, 복지 급여의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등의 규정을 신설함(2011년 4월 11일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법원이 이혼 판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

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며, 공무원 등이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나)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이동편의시설에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시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강화함(2009년 12월 29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2011년 12월 31일 공포, 2012년 1월 1일 시행).

#### 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2010년 5월 4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2010년 6월 개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하여

국가가 보육 및 교육 지원 외에 의료지원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2010년 7월 23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마)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소관 법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12년 5월 개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2012년 5월 23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1년 3월 개정에서 대한민국 국적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여 이들의 최저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2011년 3월 30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긴급복지지원법」은 2009년 4월 개정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의 기간을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 기간을 1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2009년 5월 28일 공포·시행).



□ 「모자보건법」은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짐.

- 2008년 12월 개정에서 저출산 시대의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모성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에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며,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설치와 불임극복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확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염 및 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2009년 1월 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2년 5월 개정에서는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임신중절 등을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2012년 5월 23일, 3개월 후 시행).

□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보호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하여 확대하며,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복지사회 실현의 토대를 마련함(2012년 1월 26일 공포, 1년 후 시행).

## 바)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2009년 9월 개정에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성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성차별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대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2009년 10월 9일 공포, 2010년 1월 1일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제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복지 증진 분야에서의 입법은 증가하는 다문화가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특징 지워짐.
  -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가족관계 확인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과 국적 취득 전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최저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한 사회통합 지원 강화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제결혼관행의 개선하려고 노력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시 출산·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추가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강조점을 둔 경향이 보임.
  - 아동양육지원을 위해 양육비 이행강제 및 선지급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18대 국회에서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이혼 판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법안은 거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폐기되어 제19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 다.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 법률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11년 8월 개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근로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함(2011년 9월 15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건강가정기본법」은 2011년 8월 개정에서 자녀 양육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함(2011년 9월 15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나)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 「군인사법」은 2011년 6월 개정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함(2011년 7월 25일 공포·시행).

**다)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8월 개정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2011년 9월 16일 공포·시행).

**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률**

- 「교육공무원법」은 제18대 국회에서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1년 6월 개정에서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에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2011년 7월 21일 공포·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 기간에 산입하도록 함(2012년 1월 26일 공포·시행).
- 「사립학교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2012년 1월 26일 공포·시행).
- 「유아교육법」은 제18대 국회에서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0년 3월 개정에서는 유아의 무상교육 및 유아학비 지원가구의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질문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2010년 3월 24일 공포·시행).
  - 2012년 2월 개정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

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2012년 3월 21일 공포·시행).

#### 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법률

- 「영유아 보육법」은 제18대 국회에서 4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12월 개정에서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육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의 제도화를 위한 보육시설 안전공제사업의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보육비용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 조사, 금융정보 조회 등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다문화 영유아를 취약보육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2008년 12월 19일 공포, 2009년 7월 1일 시행).
  - 2011년 4월 개정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2011년 6월 7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6월 개정에서는 종교단체·재단법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종류에 법인·단체등보육시설을 신설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어린이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

고 어린이집은 안전공제회에 당연 가입토록 하며,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절차를 통일하도록 함(2011년 8월 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을 높임으로써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2009년 7월 3일)되기 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전의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의 질을 높이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선행함(2011년 12월 3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법률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2011년 4월 개정에서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개정하며,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확대함.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 간병 휴직 등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 휴직을 허용하며,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2011년 5월 23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사)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법률

- 「고용보험법」은 2008년 12월 개정에서 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미리 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대체하여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품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함(2008년 12월 31일 공포·시행).

- 「근로기준법」은 2011년 12월 개정에서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 16주 이후 적용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모든 경우로 확대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 18대 국회에서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 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12월 개정에서는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하고, 입양자녀도 포함되도록 명시함(2010년 2월 4일 공포·시행).
  - 2011년 12월 개정에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허용 및 가족돌봄휴직 허용을 의무화함(2012년 2월 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제18대 국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
- 주된 내용은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자녀양육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 확

대 및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한 경우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 제도 사용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것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남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어서, 제19대 국회에서는 육아휴직제도의 남성 할당제 등 남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또한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이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장애를 타파하려는 진전은 있었으나, 이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아이돌봄지원법」 제정을 통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취업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며, 유아무상보육 지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아이 돌봄 노동의 사회화에 진척을 이루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아이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고령화와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라. 남녀차별개선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 「병역법」은 2011년 4월 개정에서 무관후보생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소집”의 개념에 ‘병역의무자’ 외에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추가함으로써 여성 예비역도 소집의 대상에 포함하며,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에 따라, “남



자”를 “남성”으로, “여자”를 “여성”으로 그 표현을 통일시킴(2011년 5월 24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 「군행형법」은 2009년 9월 개정에서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군수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군수용자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차별금지 원칙을 명확히 함(2009년 11월 2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 「공무원연금법」은 2011년 2월 개정에서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법 중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도모함(2011년 3월 8일 공포·시행).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 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함(2010년 2월 4일 공포, 3개월 후 시행).
-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1월 개정에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2009년 2월3일 공포·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제18대 국회에서 남녀차별개선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한 것과 공직자윤리

법상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친족의 범위를 남녀 차등을 뒀던 종전의 규정을 개정하여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통일한 것,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군 예비역도 소집 대상에 포함하는 것 등임.

- 지속적인 개정으로 직접적인 남녀차별 규정이 남아 있는 법령 수의 감소로 남녀차별 개선 법령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제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함.
- 특히 2005년 호주제 폐지 당시 부성주의 원칙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상 유보조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므로 민법 제781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면서 성별 등을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실체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요구됨.

## 마. 사회참여 확대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률

- 「공직선거법」은 제18대 국회에서 2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9년 12월 개정에서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함(2010년 1월 25일 공포·시행).
  - 2010년 3월 개정에서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하여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2010년 3월 12일 공포·시행).

#### 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여성자문위원의 역할 증대를 위해 부의장 중 여성의 비율을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2010년 5월 20일 공포·시행).

#### 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법률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6월 개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여성인력의 과학기술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적자원으로 성장, 활용될 수 있도록 함(2011년 7월 21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법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2011년 6월 개정에서 도우미 지원대상을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도우미의 지원기간은 90일 이상, 지원비율은 1일 최저임금액 이상인 도우미 1일 임금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도우미의 요건으로 영농·영어가 가능할 것과 여성농어업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아닐 것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도우미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1년 7월 14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제18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상 지방의회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단위로 여성 1인 이상 추천 의무화 조항을 도입하고,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를 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연계시키는 등의 입법 성과가 있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역구 여성공천 30% 이상 의무화와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수반하는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있어서 교호순번제 위반시 등록을 무효화하는 등의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영역과 경제활동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노력 또한 필요함.

## 바. 성 주류화 추진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여성가족위원회의 소관 법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1년 8월 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교육,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의 수립·시행에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2011년 9월 15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나) 기획재정부위원회의 소관 법률

- 「국가재정법」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2010회계연도 예산안에 첨부하여 처음으로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고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함.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2010년 5월 17일 공포·시행).

- 「국가회계법」은 2010년 4월 개정에서 국가재정법 개정과 따라 새로이 작성하게 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함(2010년 5월 17일 공포·시행).

- 「통계법」은 2010년 3월 개정에서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책임관이 총괄하는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2010년 3월 31일 공포, 3개월 뒤 시행).

#### 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법률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공적개발원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제정되었는데, 법의 기본정신에 ODA의 목적이 성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추세를 고려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포함시킴(2010년 1월 25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

#### 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 「지방재정법」은 2011년 2월 개정에서 성 인지 예산 제도를 지방재정에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2013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함(2011년 3월 8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제18대 국회에서는 성 주류화 관련해서는 성인지예산서 관련 규정 강화 및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통계책임관 의무 부여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입법제도 구축의 성과가 있었음.
- 제19대 국회에서는 제도 구축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등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법령이 새롭게 성별영향분석대상이 되었으나, 성 주류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분야

### 1) 주요 제·개정 내용

#### 가) 국회운영위원회외 소관 법률

- 「국회법」은 2010년 2월 개정에서 정부조직법개정(‘10.1.18)에 따라 부처 명칭이 변경된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부서 명칭을 반영하여 현행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함(2010년 3월 12일 공포·시행).

#### 나) 행정안전위원회외 소관 법률

- 「정부조직법」은 2009년 12월 개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2010년 1월 18일 공포, 2개월 후부터 시행).

## 2) 입법 활동 평가

- 국회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은 제18대 국회 회기 중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정비한 것으로 사소한 것에 그침.
- 제18대 국회에서는 정책 환경의 급변과 성주류화 정책 영역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법으로서의 성평등한 정책방향을 선도하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제19대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와 관련하여 성평등 추진을 위한 성 주류화 업무를 『정부조직법』상의 여성가족부 업무로 명시하고, (가칭) 성평등정책위원회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

### 아. 종합

- 이상, 제18대 국회에서 여성·가족 관련 남녀차별의 개선,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여성·가족 복지증진, 돌봄노동의 사회화,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사회참여 확대, 성 주류화 추진,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여전히 남겨진 과제가 있음을 살펴봄.
- 제18대 국회에서는 우리사회의 현안과제인 경제적 불평등의 여성집중화 개선을 위한 입법적 조치와 2차 가족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가족(가구) 형태 변화에 따른 관련 법제의 정비, 고령화에 따른 노인, 특히 여성노인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 돌봄, 노후소득보장 등에 대한 입법적 대응 등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제19대 국회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함.

### III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및 방향

- |                        |    |
|------------------------|----|
|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 47 |
|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 63 |



이 장에서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현황 및 그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1.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환경

- 우리 사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을 둘러싼 입법 환경으로는 멈추지 않고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동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성별 격차와 가족구조의 변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가.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 1) 2001년 이후 초저출산<sup>4)</sup> 사회로 진입

- 한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1) 이하로 하락한 이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OECD 222개 국가 중 최저수준(217위)임. 만혼화와 비혼화 추세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35~39세 여성 미혼율은 2000년 4.3%에서 2010년 12.6% 증가하였고, 10년 이내에 20%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30대 청년층 전반의 미혼율은 2000년에 13.4%(남자 19.2%, 여자 7.5%)에서 2010년 29.2%(남자 37.9%, 여자 20.4%)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향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둔화되어 2017년 4,925만명으로 절정에 이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잠재성장을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 현재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10위)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순위는 점차 하락하여 2022년부터는 최하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4)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사회를 초저출산 사회라고 함.

〈표 Ⅲ-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생아 수	491	473	435	448	493	466	445	470
합계 출산율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

출처: 통계청, 2010년 출생통계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수)

※ 2010년 합계출산율은 확정치임

## 2)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높은 노인 빈곤율

- 국민 영양과 보건의료 수준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노인 인구는 2010년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38.2%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별 인구 격차는 확대됨.
-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현재 고령자 연령별 성비는 60~64세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93.0명, 65~69세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85.1명, 70~74세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75.3명, 75~79세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61.0명, 80~84세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45.4명, 85세 이상에서는 여성 100명당 남성 34.8명임.

〈표 Ⅲ-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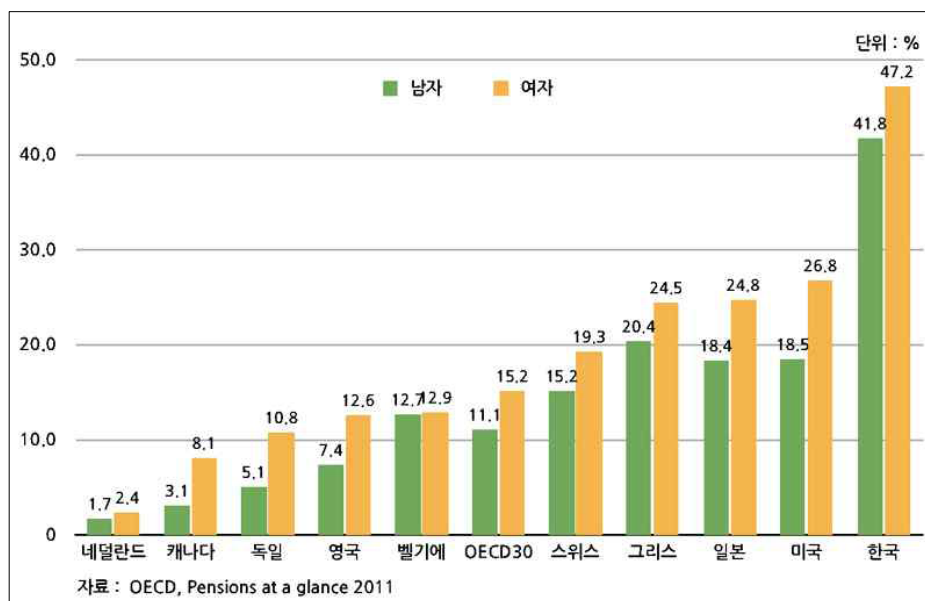
연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2010	11.0	22.5	16.5	20.5	20.6	17.3	12.8	16.6
2015	12.9	26.2	18.5	20.9	22.1	18.3	14.1	18.1
2020	15.6	28.4	20.2	22.4	23.2	19.5	15.8	18.9
2025	19.9	29.5	21.7	24.4	24.6	21.4	17.8	19.9
2030	24.3	30.6	23.2	27.3	27.0	23.9	19.4	21.6
2035	28.4	32.3	24.3	29.8	29.6	26.7	20.2	23.1
2040	32.5	34.9	25.3	30.3	31.8	29.7	20.5	23.7

연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2045	35.5	36.6	25.6	30.1	32.8	32.2	20.6	23.7
2050	38.2	37.7	25.9	30.2	32.6	33.2	21.0	24.1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06), '새로마진플랜 2015'에서 재인용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

- 한국의 65세 이상 남성의 소득 빈곤율은 41.8%이고 여성은 47.2%임. 이는 OECD 주요 30개국 남성 소득 빈곤율 평균 11.1%, 여성 15.2%와 비교해 3~4배 이상 높은 수준임(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OECD 주요 국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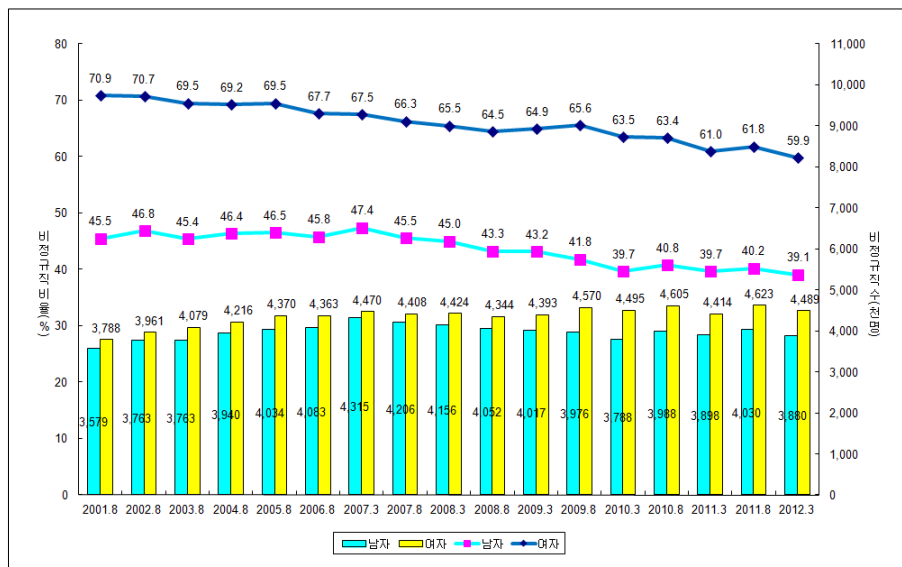
-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비율은 79.9%로 이 중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736만원임. 소득증가율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 소득 증가율의 약 1/2 수준에 불과함(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 65세부터 74세 여성노인의 만성질병은 남성노인의 2배 정도이고, 75세 이상은 여성노인의 만성질병이 남성노인보다 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년).

## 나. 고용불안과 경제적 불평등의 여성집중화

### 1)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의 증가와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심화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의하면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3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8.0%를 차지함. 이 중 여성 비정규직근로자는 449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3.6%로 2명 중 1명은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임. 200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의 남녀비율에는 차이가 적었으나, 이후 남성비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여성은 증가하여 성별격차를 보임(그림 III-2 참조).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3)결과에서 재인용

〈그림 III-2〉 성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2001~2012년)

- 2007년 3월에는 여성 비정규직근로자가 남성 비정규직근로자보다 15만 명 (20.1%p) 많았지만, 2012년 3월에는 61만 명(20.8%p)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음.
-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성비정규직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음.
-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12년 3월 61.3%이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2.2%임.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2%이고, 여자 정규직은 66.3%이고, 여자 비정규직은 39.6%에 그치고 있음(표 Ⅲ-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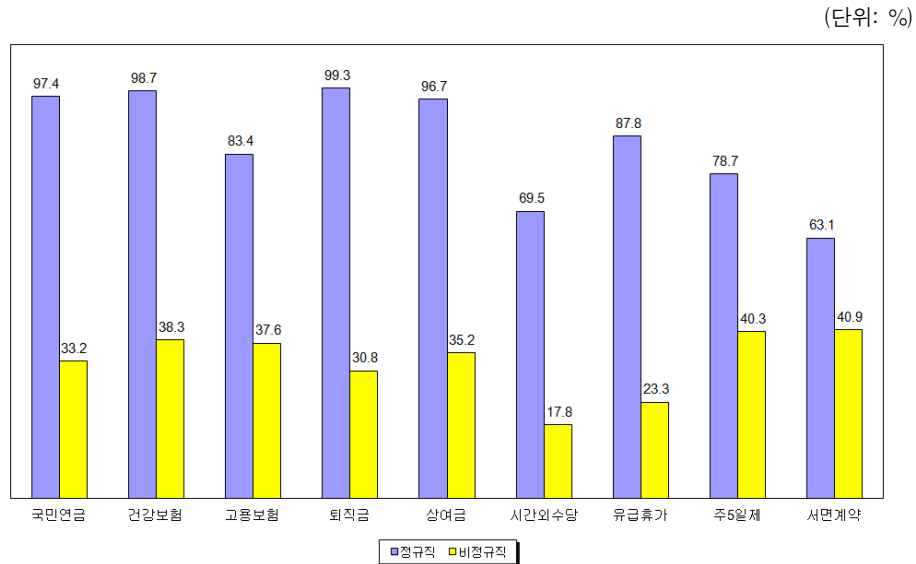
〈표 Ⅲ-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단위: 원, 비율)

구분	시간당 임금(원)							임금격차(%)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09년 3월	09년 8월	10년 3월	10년 8월	11년 3월	11년 8월	12년 3월
남자	11,870	11,961	12,686	12,699	13,288	13,406	14,1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7,392	7,460	7,818	7,882	8,246	8,378	8,670	62.3	62.4	61.6	62.1	62.1	62.5	61.3
정규직	13,547	13,730	14,375	14,401	14,754	14,831	15,3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6,738	6,650	6,828	6,951	7,353	7,603	7,985	49.7	48.4	47.5	48.3	49.8	51.3	52.2
남자정규직	15,069	15,172	15,992	16,079	16,555	16,632	17,2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7,657	7,488	7,665	7,787	8,321	8,600	9,331	50.8	49.4	47.9	48.4	50.3	51.7	54.2
여자정규직	10,156	10,395	10,769	10,745	10,977	11,043	11,428	67.4	68.5	67.3	66.8	66.3	66.4	66.3
여자비정규직	5,898	5,921	6,123	6,228	6,497	6,733	6,822	39.1	39.0	38.3	38.7	39.2	40.5	39.6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 3)결과에서 재인용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여성비정규직은 75만명으로 전체 여성비정규직의 23.5%로 여성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임.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33~38%에 그치고 있음.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5%만 적용받고 있음(그림 Ⅲ-3참조).



자료: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 3)결과에서 재인용

〈그림 Ⅲ-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12년 3월)

-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함.

## 2) 저임금근로자<sup>5)</sup>의 여성집중화

-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2.7%로 나타남. 여성 10명 중 4명이 저임금근로자인 것임. 이는 해당 연도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OECD국가 평균의 두 배, 핀란드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임. 같은 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17.3%로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임.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격차(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 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또한 2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5) 저임금근로자란 전체 전일제 근로자의 중간 임금, 다시 말해 임금의 중간값(median wages)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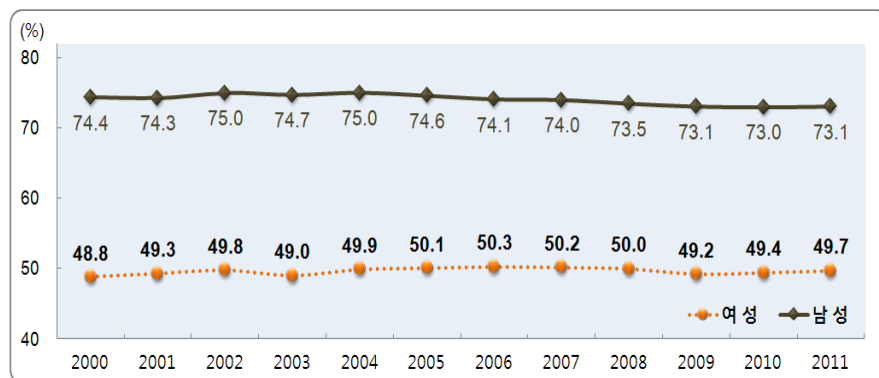
### 3)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여성 빈곤 심화

- 지난 20년간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1990년 0.256 수준의 지니계수가 2011년에는 0.289수준으로 악화되었음. 이와 같은 불평등의 심화는 여성가구주 가구 등 여성의 빈곤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침.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추이를 보면, 전체빈곤율은 2003년 14.6%에서 2009년 16.8%로 2.2% 소폭 증가하였음.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3년에도 전체의 2배 수준인 27.3%에 달했으며 2009년에는 30.0%로 3가구 중의 1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남(김영옥 2012년).

## 다. 축소되지 않는 성별 격차

### 1)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

- 2011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2010년(49.4%)에 비해 0.3% 상승하였음. 반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3.1%로 여성과는 23.4%의 차이를 보임(그림 Ⅲ-4 참조).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3%로 2000년에 비해 2.4% 증가하였으나, 대졸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89.3%)보다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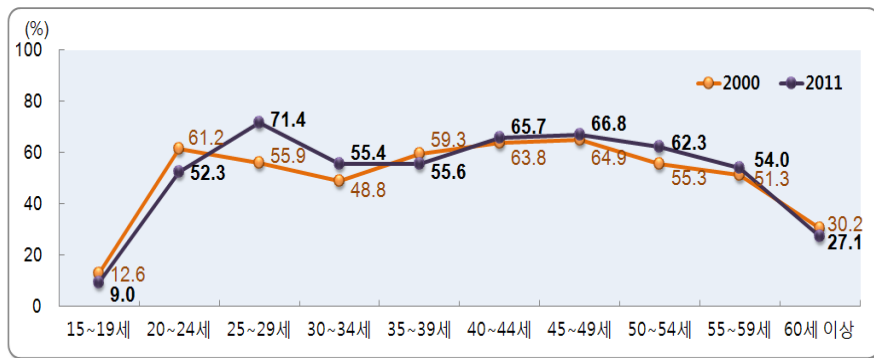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Ⅲ-4〉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2) 변화되지 않는 M자 곡선

- 2011년 현재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5~29세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러나 결혼·육아 등으로 30~39세는 55%대 수준으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40대 초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증가함. 2000년과 비교하면 20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았으나 출산과 육아시기에 감소, 30대 후반에 다시 증가하는 유사한 M자 패턴을 보임. 한편 50~5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2000년에 비해 7.0% 증가했음(그림 III-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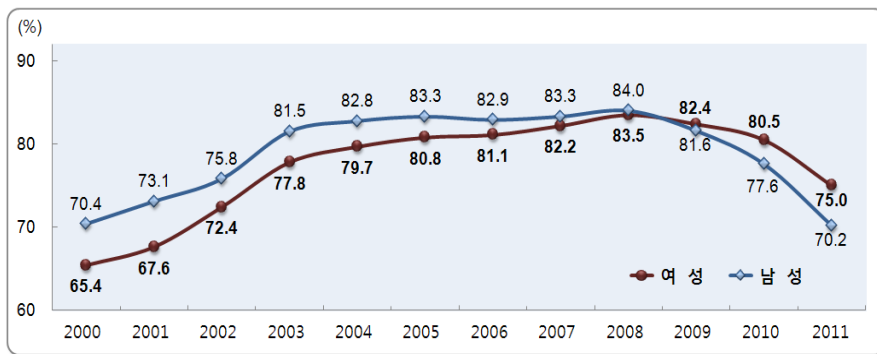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그림 III-5〉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3) 여성의 높은 대학진학률과 정치·행정·경제분야의 낮은 대표성

- 2011년 현재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75.0%로 남학생 70.2%보다 높고, 2009년 이후부터 여성의 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남. 남녀 간의 대학 진학률 격차가 2010년 2.9%, 2011년 4.8%로 더 크게 벌어졌으며, 전문대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의 경우 모두 여성의 진학률이 높았음(그림 III-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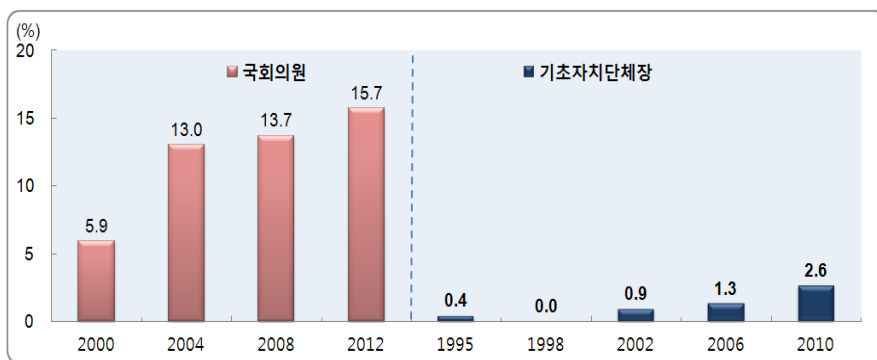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주: 1)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중 상급학교에 진학한 사람의 비율(재수생 미포함)  
 2) 국내진학자에 한함  
 3)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포함  
 4) 2011년부터 진학자의 조사기준을 2월 졸업 당시 대학합격자에서 4월 1일 현재 대학등록자로 조정

〈그림 Ⅲ-6〉 남녀대학진학률 추이

- 2000년 5.9%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2년 현재 15.7%로 9.8% 증가했으나, 국제의원연맹(IPU) 회원국의 평균 1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0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은 2.6%(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음)로 매우 낮은 수준임(그림 Ⅲ-7 참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그림 Ⅲ-7〉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비율

- 2010년 현재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1년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행정고시 38.8%, 사법고시 37.3%, 외무고시 53.1%로 나타남. 그러나 2010년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6.3%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직급별로 여성 공무원의 비중을 보면, 4급은 7.2%, 3급은 4.7%, 고위 공무원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음(표 Ⅲ-4 참조).

〈표 Ⅲ-4〉 공직 내 4급 이상 여성관리자<sup>1)</sup> 비율

(단위: 명, %)

연도	4급이상		고위공무원		3급		4급	
		여성비율		여성비율		여성비율		여성비율
2007	7,008	4.5	980	1.0	613	4.1	5,415	5.2
2008	6,776	4.9	901	1.4	559	3.9	5,316	5.6
2009	6,971	5.8	948	1.9	606	4.6	5,417	6.6
2010	7,014	6.3	936	2.4	617	4.7	5,461	7.2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보, 각년도

주: 1) 국가공무원 일반직

- 한국 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2009년 1.1%, 2010년 1.5%, 2011년 1.9%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노르웨이의 여성이사 비율 39.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기업에 종사하는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는 2010년 현재 공공기관 10.53%, 민간기업 17.13%에 그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완전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봤을 때 62.6점에 불과함.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이었고,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직 부문임(여성가족부, 2011년).

## 라. 변화하는 가족(가구)

### 1) 2차 가족혁명, 가족(가구)형태의 다양화

#### □ 1인 및 2인가구의 증가

- 2010년 현재 가구형태는 부부+자녀가구가 642만7천 가구(37.0%)로 가장 많고, 1인가구(23.9%), 부부가구(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 비율은 2035년에는 1인 가구(34.3%), 부부가구(22.7%), 부부+자녀가구(20.3%)순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1인 및 2인 가구는 2010년 835만5천 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7천 가구(68.3%)로 증가할 전망되고,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2010년 2인>1인>4인>3인순이던 것이 2012년 이후는 1인>2인>3인>4인순으로 전망됨(표 Ⅲ-5 참조).

〈표 Ⅲ-5〉 가구구성별 추계가구

(단위: 가구, %)

추계가구 및 구성비		총조사가구			장래가구추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가 구 수	계	7,969,201	11,354,540	14,311,807	17,339,422	19,011,815	19,871,144
	부부	478,458	942,479	1,765,365	2,671,616	3,360,429	4,112,353
	1세대기타	179,958	277,188	268,398	355,778	320,081	289,282
	부부+자녀	4,223,236	5,895,025	6,891,558	6,415,673	7,215,406	6,709,402
	한부모+자녀	743,627	888,823	1,123,854	1,594,138	1,636,839	1,618,055
	부부+부모	47,237	92,158	137,414	159,523	233,787	258,797
	2세대기타	443,240	653,071	543,256	722,890	717,187	814,489
	3세대이상	1,353,745	1,418,091	1,198,298	1,075,376	1,225,322	1,204,444
	1인가구	382,743	1,021,481	2,224,433	4,142,165	4,109,276	4,713,083
	비혈연가구	116,957	166,224	159,231	202,263	193,488	151,239
구 성 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부	6.0	8.3	12.3	15.4	19.6	24.0
	1세대기타	2.3	2.4	1.9	2.1	1.9	1.7
	부부+자녀	53.0	51.9	48.2	37.0	42.1	39.1

추계가구 및 구성비		총조사가구			장래가구추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한부모+자녀	9.3	7.8	7.9	9.2	9.5	9.4
	부부+부모	0.6	0.8	1.0	0.9	1.4	1.5
	2세대기타	5.6	5.8	3.8	4.2	4.2	4.7
	3세대이상	17.0	12.5	8.4	6.2	7.1	7.0
	1인가구	4.8	9.0	15.5	23.9	24.0	27.5
	비혈연가구	1.5	1.5	1.1	1.2	1.1	0.9

출처: 통계청, 2010인구주택총조사(가구), ‘가구구성별 장래가구추계’

\* 1세대 기타: 부부+형제자매(친인척), 가구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1세대기타

\* 한부모+자녀: 부+자녀, 모+자녀

\* 부부+부모=부부+양친, 부부+한부모

\* 2세대기타: 부부+자녀+형제자매, 조부모+손자녀+2세대기타

\* 3세대이상: 부부+자녀+양친, 부부+자녀+한부모, 3세대기타, 4세대이상

- 1인 혹은 2인 가구의 증가추세는 개인화에 따른 자녀분가,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만혼화와 이혼률의 증가 및 저출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 독거노인의 증가와 빈곤

-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체 1인 가구에서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9%로 이들의 규모는 13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60세 이상 독거노인의 상대빈곤율은 70% 안팎인데 비해 취업률은 26.2%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임.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다수가 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하고, 65세 이상 여성은 각 연령대에서 20%이상이 독거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수가 2010년 102만 가구에서 2020년 151만 가구, 2030년 234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이혼율의 증가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증가

-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체 일반가구의 9.2%가 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구로 이혼율의 증가와 분거가족의 확산으로 이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부모가족의 변화추이 살펴보면 1995년의 7.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9.2%수준이며 이들 대부분(7.2%)이 모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의 비율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족 증가

- 2011년 외국인과의 혼인한 건수는 2만9,762건으로 총 혼인건수의 9.0% 차지함.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005년 13.5%를 기록한 이후, 9~11% 수준을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표 III-6 참조).

〈표 III-6〉 외국인과의 혼인

(단위: 건, %)

연도	총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	구성비	한국남성+외국여성		한국여성+외국남성	
				혼인건수	구성비	혼인건수	구성비
2000	332,090	11,605	3.5	6,945	59.8	4,660	40.2
2005	314,304	42,356	13.5	30,719	72.5	11,637	27.5
2006	330,634	38,759	11.7	29,665	76.5	9,094	23.5
2007	343,559	37,560	10.9	28,580	76.1	8,980	23.9
2008	327,715	36,204	11.0	28,163	77.8	8,041	22.2
2009	309,759	33,300	10.8	25,142	75.5	8,158	24.5
2010	326,104	34,235	10.5	26,274	76.7	7,961	23.3
2011	329,087	29,762	9.0	22,265	74.8	7,497	25.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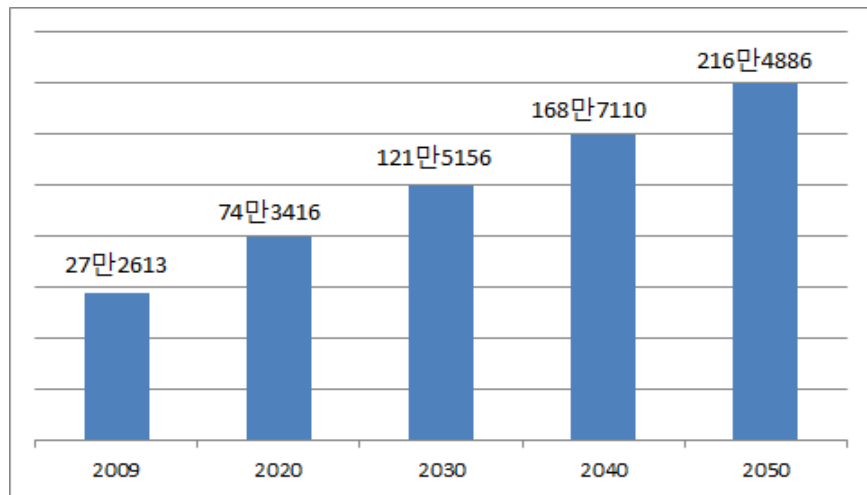
〈표 Ⅲ-7〉 국제결혼건수-성별비교

(단위: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국제결혼 총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한국남자 + 외국여자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한국여자 + 외국남자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가져옴. 다문화가족 인구는 2009년 현재 27만2613명에서 2050년 216만4886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Ⅲ-8 참조).



출처: 이삼식, 최효진, 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Ⅲ-8〉 다문화가족 인구 추정치

## 2)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약화

- 남녀 모두 생존을 위한 노동시장 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임. 2011년 통계청의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 유배우가구(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1162만 가구로 이중 맞벌이는 507만 가구임. 이는 유배우가구의 43.6%로 홑벌이가구(491만 가구, 4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에 따라 그동안 가족 내 여성에 의해 수행되어온 자녀양육, 노인돌봄의 탈가족화가 진행됨.

〈표 Ⅲ-8〉 아동보육상태별 아동인구(2010)

구분	보육상태					
	계	비율	단일응답		복수응답	
				비율		비율
계	6,264	100.0	4,628	73.96	1,636	26.1
부모	3,009	48.0	2,022	32.3	987	15.8
조부모	637	10.2	360	5.7	377	4.4
기타 가족, 친인척	82	1.3	46	0.7	37	0.6
가사도우미, 이웃사람	64	1.0	36	0.6	28	0.5
유치원	537	8.6	272	4.3	265	4.2
어린이집, 놀이방	1,058	16.9	706	11.3	351	5.6
기타 보육시설	40	0.6	22	0.3	19	0.3
방과후 학교	535	8.5	214	3.4	322	5.1
학원	1,655	26.4	831	13.3	824	13.2
혼자, 아동끼리	277	4.4	116	1.9	161	2.6
기타	7	0.1	4	0.1	3	0.0

출처: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 아동보육상태는 주된 것 2개까지 선택가능하도록 조사되었으며, 복수응답은 해당 응답항목에 각각 반영되어 계와 일치하지 않음.

〈표 Ⅲ-9〉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시설급여: 2008~2010

(단위: 개소, 명)

구분	총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2008	1,717	68,581	1,303	65,152	414	3,429
2009	2,627	88,266	1,628	78,852	999	8,414
2010	3,751	116,782	2,408	105,478	1,343	11,304

출처: 2011 보건복지통계, 보건복지부

〈표 Ⅲ-10〉 노인장기요양기관 현황-재가서비스: 2008~2010

(단위: 개소, 명)

구분	총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 용구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2008	10,224	4,362	3,006	626	806	13,145	691	7,030	733
2009	19,074	8,446	6,279	787	1,106	18,302	1,370	14,682	1,086
2010	19,947	9,164	7,294	739	1,273	20,804	199	1,811	1,278

출처: 2011년 보건복지통계, 보건복지부

## 마.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여성

-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여성폭력 사건은 매년 사회문제로 등장함. 이는 법·제도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폭력 피해로부터 여성들이 보호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여성가족부의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5.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난 1년간의 경험이 아닌 평생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인여성 1천명당 42.1명이 강간 또는 강간미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됨.
- 성인 여성의 35.6%가 일상생활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성폭력가해자의 67%가 아는 사람이고, 15%가 가족 및 친적인



것으로 나타남. 공사영역을 불문하고 여성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여성가족부의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의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나타났음. 65세 미만 부부 6쌍 중 1쌍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65세 미만 기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2007년)이나 일본(3.0%, 2001년)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

이상과 같은 여성·가족 입법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여성·가족 관련 입법의 방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가. 돌봄노동의 사회화

-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은 가족 내 아동과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화 요구를 한층 강화시킴.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주로 무보수로 수행하던 돌봄노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가시화시키는 것임.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재)가족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 또한 돌봄노동의 상품화(시장기제의 활용)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은 돌봄노동종사자의 근로조건 등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종사자의 지위를 안정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나. 성평등한 일-가족양립 지원정책

- 저출산·고령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비한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일-가족양립지원이 강화될 필요성을 증가시킴. 일-가족양립은 사회 각 구성원이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을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하고 때로는 거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임(장지연 2005). 이를 위해서는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 및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제도의 기업부담 완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여왔고,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은 여성근로자가 아닌 남녀 근로자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한 정책은 일시적인 휴직제도 등의 확대가 아닌 하루하루의 노동세계를 가족친화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탈젠더화와 함께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의 개편 등 노동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 다. 사회안전망의 재구축

- 고령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증폭시켜 남녀 모두 자신의 소득의 극대화에 집착하게 되므로 고용과 소득불안정은 해소되어야 함. 또한 여성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강, 돌봄, 그리고 노후 소득보장 등 연금과 의료시스템 등 사회안전망이 재구축 되도록 해야 함.

## 라.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

-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최대 요인은 여성 근로자의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임. 따라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비정규직 개선 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처럼 높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이에 따른 여성의 고용불안정,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저임금 근로자화 등의 문제는 지속될 것임.

- 상시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보장 및 근로조건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그리고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금지의 실효성 제고와 여성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사회보험 국가지원을 확대해야 함.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최저임금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마. 성별격차 해소

-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함. 또한 변화지 않는 M곡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탈젠더화를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추진해야 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공보육시설 확충 등 제반 인프라가 보다 강화되도록 해야 함.
- 여성의 고학력화에 상응하지 못하는 정치·행정·경제분야 여성의 낮은 대표성은 일정기간 동안은 할당제나 목표제 등의 입법화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함.

#### 바.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

-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또한 2005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폐지에 의해 성차별 의제의 중요성과 비중

이 법체계 상 약화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 이른바 “성주류화”를 위한 3대 도구의 실효성 제고와 각 제도간의 연계와 정책 환류 등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이 내실화되도록 해야 함.

### 사. 핵가족 중심에서 개인단위로 사회보장제도 수정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현행 핵가족 중심의 법과 제도는 개인단위로 수정되어야 함. 1인 및 2인 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가구유형 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핵가족 중심의 주택, 세제 등 기존 제도와 정책에 대한 조정 및 변경이 불가피함.
- 예컨대, 현행 4인 가구 중심의 최저생계비의 산정기준과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제도 등은 개인단위로 변화되어야 함.

### 아.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sup>6)</sup>

- 1인 및 2인 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가구)의 증가는 한부모 상태의 가구 증가와 빈곤상태의 노인가구, 다문화 가족의 증가를 동반함. 가족 테두리 내의 전통적인 안전망을 벗어난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 한부모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가구주의 경제활동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빈곤 한부모에 대해서는 양육비 보조를 보다 현실화하고 의료급여 확대 등의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는 ‘양육비지급의무 강제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함.
-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재정립하고,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지원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확대되도록 해야 함.

6) 김영철·김연수·김인경,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1 참조.

-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족 아동,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그들의 인권보장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함.

### 자. 젠더에 기반한 폭력중식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불구하고 젠더폭력 피해 발생율은 줄어들지 않고 여성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하고 있음.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중심 그것도 아동성폭력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가해자 처벌 강화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와 젠더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리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젠더폭력 관련 법률 중 가해자 처벌관련은 형법으로 편입하는 것도 고민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아동성폭력 사건에 가려져 관심과 대응이 미약했던 가정폭력,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법제도적 개입이 필요함.

## IV

---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

- |                                      |     |
|--------------------------------------|-----|
|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br>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71  |
|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br>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 88  |
|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98  |
|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101 |
|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 106 |
|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132 |
|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br>입법과제         | 137 |
|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38 |

이 장에서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 방향’에 근거하여 제19대 국회 회기 중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법률 제·개정에 대하여 8개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함.

## 1.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가. 여성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개정

#### □ 개정 배경

- 201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837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48.0%를 차지함. 이 중 여성 비정규직근로자는 449만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53.6%로 2명 중 1명은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임.
-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심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여성비정규직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음. 남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임금은 2012년 3월 61.3%이고,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2.2%임.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4.2%이고, 여자 정규직은 66.3%이고, 여자 비정규직은 39.6%에 그치고 있음.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3~99%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33~38%에 그치고 있음.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0~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18~35%만 적용받고 있음.
- 이처럼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차별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시정을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비정규직보호법’이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 □ 개정 방향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차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대우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이 원칙이 성별, 국적, 학력 및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차별 판단의 비교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차별판단의 비교대상에 대해 기간제법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및 ‘통상 근로자’(단시간근로자의 경우)로 규정하고,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근로자’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함. 많은 사업장에서 정규직 직군·비정규직 직군 분리를 통해 차별금지를 회피하려는 점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직군 등의 분리의 경우를 최대한 포함시키고, 근로조건 저하만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 동일·유사 업무 종사하였던 근로자를 비교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2).

## □ 개정안 예시

## 1) 근로기준법

현행법	개정안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연령·고용형태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신 설>	제6조의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①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을 말한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p>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p> <p>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p> <p>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3) 파견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p>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p> <p>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p> <p>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나. 여성저임금근로자의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1) 여성저임금근로자의 저임금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 개정 배경

-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하는 제도임.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최저임금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상승되었지만, 근로자 평균 임금의 1/3(2010년 37.9%)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의 비율은 42.7%이고, 여성 10명 중 4명이 저임금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여성비정규직은 75만명으로 전체 여성비정규직의 23.5%로 여성비정규직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임.

- 2010년 최저임금(858,990원)은 미혼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1,312,755원)의 65%로 가계지출 규모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03년~2008년 동안 평균 10.6%이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9년~2012년 들어 5%로 크게 낮아졌음.
-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과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함.

#### □ 개정 방향

- 최저임금법의 개정 방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의 삭제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의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르면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음. 간병, 육아, 가사도우미 등 가사사용인의 규모는 현재 약 30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99%가 여성들임.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삭제해야 함.
-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OECD 가입국 최저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임.
- 최저임금이 여성근로자의 저임금과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결정기준에 물가인상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 최저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문화함.

□ 개정안 예시: 최저임금법

현행법	개정안
<p>제3조(적용 범위)</p> <p>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u>가사(家事) 사용인에게</u>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p> <p>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③ (신설)</p>	<p>제3조(적용 범위)</p> <p>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u>사업에는</u>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p> <p>① 최저임금은 <u>근로자의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근로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2)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 관련법 개정**

□ 개정 배경

-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사업체규모, 임금계층, 고용형태 등 일자리 특성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에 의하면 고용·건강·국민연금 등 하나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는 458만5000명(27.6%)으로 나타남. 이 중 83%인 382만1000명은 3대 사회보험 모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특히 3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86만2000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음.
- 저임금계층(시간임금이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인 경우)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3.5%로 매우 낮고, 국민연금도 40%에 머무르고 있음. 비정규직의 경우 가입률은 국민연금 32.1%, 건강보험 36.9%, 고용보험 36.2%로 정규직근로자의 83~98.8%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는 실직 시 소득상실, 고용정책 접근의 제한, 노후소득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높음.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여성노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미가입은 여성노인의 노후 빈곤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일차적 방안은 가입의무 대상이면서 미가입 사업체를 사회보험 징수 당국의 적발과 제재라는 행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임.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황에서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미가입자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누락 사업장 및 근로자를 파악하는 유력한 방법은 국세청 및 사회보험공단 간 고용·소득·사회보험가입 여부 등에 관한 전산화된 행정 정보의 공유임. 그러나 행정적인 적발과 제재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은 사회보험 구조 자체에서 기인하는 측면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 스스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임. 사회보험 기여 대비 낮은 급여문제, 저임금, 고용불안 등이 기여회피를 가져옴.
- 또한 사회보험료는 적용대상 확대, 재정안정화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근로소득세에서 면세점이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회보험료율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특히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 따라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음.

#### □ 개정 방향

-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

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고용보험가입자수 10인 미만으로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저임금근로자와 영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감 대상과 범위가 협소하여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고용보험료 지원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정할 수밖에 없음.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최저임금의 15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개정하고, 점차적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규정도 위 법률과 동일하게 신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개별법이 아닌 특별법의 형태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 예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부담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부담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할 것 2.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 다. 돌봄 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 개정 배경

- 돌봄 노동을 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수행해 오면서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 형태로 이루어져 온 결과 돌봄 제공자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옴.
- 이러한 인식은 현행 노동관계 법령 속에 명시적으로 가사사용인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반영되어 있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 그 대표적인 예임.
- 그러나 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고령화, 핵가족화, 여성경제활동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돌봄 노동의 수요는 가사, 보육, 간병, 노인요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2011년 6월 16일 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의 정기휴일보장, 산업재해 보상, 가사노동계약서 작성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노동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이 채택됨.
  - 이는 가사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관한 전 지구적인 공감대 형성의 결

과이며, 국제노동기구의 회원국인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 돌봄 제공자들이 언제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각종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의 인정이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함.
- 따라서 가사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 프랑스나 벨기에, 네덜란드에서는 가사사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도 가사노동자에게 일반 노동 법령을 적용하고 있음.

#### □ 개정 방향

##### ○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

- 2011년 6월 16일 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된 가사노동협약(Convention on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가사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노동권 보호 도모함.

#####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 삭제

- 근로기준법 제1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조,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서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문구 삭제.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가능해짐.

##### ○ 돌봄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 실직과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곤경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험혜택의 제공을 필요로 함. 사회구성원으로서 처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험은 사회에서 함께 부담하는 것이 더욱 현대의 복지국가의 이상에 부합함.
- 근로계약의 형식상 돌봄 노동의 이용자가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체계적인 보험가입의 관리 및 재원의 조달이 예상됨.
- 따라서 기준보수 적용 등 특칙을 두고 국가에서 보험가입에 대한 관

- 리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가사사용인을 위한 특례 규정.

□ 개정안 예시

○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 삭제

1) 근로기준법

현행법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현행법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저임금법

현행법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생략)

○ 돌봄 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확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행법	개정안
<신설>	제126조의2(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가사사용인(이하 “가사사용인”이라 한다)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가사사용인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사용인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가사사용인의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 재해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용보험법

현행법	개정안
	제113조의2(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가사사용인(이하 “가사사용인”이라 한다)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법	개정안
<신설>	② 가사사용인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이직한 가사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④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120일 이상일 것 ⑤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것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제3조(기준보수) ①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보수”라 한다)을 보수로 할 수 있다.	제3조(기준보수) 다음 각 호의 경우 ①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사사용인(이하 “가사사용인”이라 한다)의 경우…  제49조의4(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 적용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료와 고용보험료율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 ③ 직업안전기관은 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 관계와 관련된 신고 등 보험에 관한 사무와 가사사용인의 근로내용·이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가사사용인의 고용보험관계는 직업 안전기관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현행법	개정안
	<p>제49조의5(가사사용인의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p> <p>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사사용인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가사사용인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료율은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고 산재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한다.</p> <p>③ 가사사용인의 산재보험관계는 가사 사용인이 직업안전기관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성립한다.</p>

## 라. 여성비정규직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 개정 배경

-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임신·출산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함. 모성보호는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국민을 재생산하는 막중한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UN과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 및 선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어 온 개념임.
- 모성보호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산휴가제도임.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전후 90일(산후 45일 보장)의 유급휴가로서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됨. 지원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임.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부담하되,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분의 급여 모두를 고용보험이 부담함.
- 출산휴가 사용현황을 고용보험DB를 통해 살펴보면, 출산휴가 사용자는 2002년 22,711명에서 2010년 75,742명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고,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도 2002년 22,602백만 원에서 2010년 192,564백만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처럼 출산휴가 사용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는 고무적임.
- 그러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이 제도를 사용하는 데는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함.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임금근로자 747.6만명 중 비정규직이 320.3만명(42.8%)이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음. 이는 여성 임금근로자 중 약 40% 정도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70%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현실은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제도 접근기회 자체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것은 여성의 비정규직화로 표현되는 한국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상 기존 출산전후휴가의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여성근로자 집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2011년)에 의하면, 신청 단계를 거쳐 출산여성이 출산전후휴가와 급여를 모두 수령한 비율은 정규직 500명중 252명으로 50.4%, 비정규직 500명중 101명으로 20.2%에 그침. 출산전후휴가를 얻은 비정규직 여성의 절반(54.0%)이 무급으로 사용했고, 수급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 □ 개정 방향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임.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신에 실업급여를 받게 됨. 그러나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실직 전 임금의 100%인 산전후 급여에 비해 낮음. 고용보험법 제77조를 개정하여, 이직할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제73조 제1항의 적용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한하여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  
 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함.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출  
 산전후휴가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  
 정을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신설하거나,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에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기  
 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출산전후휴가 수급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  
 상자는 휴가 종료일 포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임.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한시적근로자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이 180일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음. 따라  
 서 출산휴가제도의 수급자격에서 180일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근속 180일 이상의 자격제한  
 을 없애는 것은 실업급여 제정의 적자로 인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있음. 180일 기준을 삭제하기 보다는 수급자격 기간을 하  
 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안 예시

1) 고용보험법

현행법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시행일 : 2012.8.2.]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일 것

현행법	개정안
제77조(준용) 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와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 2) 근로기준법

현행법	개정안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 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②(현행과 같음)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와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근로자가 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⑥(현행과 같음)

현행법	개정안
<p>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lt;신설 2012.2.1.&gt;</p> <p>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2.2.1.&gt;</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lt;개정 2007.12.21, 2012.2.1.&gt;</p> <p>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2.1.&gt;</p> <p>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lt;신설 2008.3.28, 2012.2.1&gt;[시행일 : 2012.8.2.]</p> <p>⑦ &lt;신 설&gt;</p>	<p>⑦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출산휴가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 만료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p>

## 2. 일-가정 양립 및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입법과제

### 가. 돌봄노동의 남성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 1) 돌봄노동의 남성참여를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 개정 배경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가족 내 여성에게 돌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체계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음. 그러한 공백을 메울 사회적 노력의 미비는 만혼화와 비혼화로 이어져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저출산 사회로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저활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과거에 비해 늘어나긴 하였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에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일-가족양립은 저출산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률 제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임. 특히 육아휴직은 가장 오랫동안 변화·발전되어온 대표적인 일-가족양립지원정책임.
-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고용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임.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음.
-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당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 여성근로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1995년 개정으로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서 2006년에는 생후 3년 미만 된 영유아,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되었음. 또한 2001년 육아휴직급여가 신



설됨으로써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초기 월 20만원에서 조금씩 확대돼 2011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가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일정비율(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됨.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확대되었음. 그리고 2008년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도입됐으며, 이외에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다양한 조항들이 만들어짐.

- 2011년 현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총 58,137명 중 여성은 56,735명으로 97.6%를 차지 한 반면 남성은 1,402명으로 2.4%에 불과함. 여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02년 3,68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10년 기준 40,914명, 2011년 56,735명으로 나타남. 산전후 휴가자 대비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 2002년 16.2%에서 2010년 54.0%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 남성 사용자가 전체 육아휴직사용자 중 2%에 불과한 것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부모 각각 1년씩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지만,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대체율, 육아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 원인으로 작용함. 따라서 남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개정 방향

- 돌봄노동의 남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성근로자의 ‘영아 육아휴가제도’와 육아휴직에 이른바 ‘파파쿼터제’ 도입이 필요함.
-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출산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30일간의 영아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과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4개월로 2개월 연장하고,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나머지 2개월은 남성 근로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19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p>&lt;신 설&gt;</p> <p>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lt;후단 신설&gt;</p> <p>&lt;신 설&gt;</p>	<p>제18조의3(남성근로자 영·육아휴가)</p> <p>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육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영아 육아휴가를 마친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p> <p>④ 영아 육아휴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육아휴직)</p> <p>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4개월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2개월을 넘지 못한다.</p> <p>③ 사업주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 이상은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야간근로 규제-‘근로기준법’ 개정

□ 개정 배경

-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은 그동안 자녀양육기의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있었음. 그러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혹은 자녀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는 생산노동에 참여함과 동시에 가족적 책임이 있는 가족의 일원이고, 시민의 한 사람임. 근로자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이 균등하게 보장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의 변화가 무엇보다 요구됨.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시간 중 근로시간은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은 분명함. 그렇다고 해서 근로시간만이 중요하고 다른 시간들이 부차적인 것은 아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

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연간 2천255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천766시간보다 31.7%나 길게 나타남.

- 2004년 40시간제 도입 등으로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었지만 실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근로자의 30%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법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42%가 근로시간 특례업종 허용지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임.
- 장시간근로는 ‘남자는 직장,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을 전제로 형성된 것임.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가족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근로자를 기본적인 ‘근로자 상(像)’으로 하여 발전해왔음. 이제는 ‘근로시간’ 중심에서 벗어나, 남녀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가족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ILO의 협약에 따르면, 가족친화적인 근로시간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하는 부모가 그들의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근로시간을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가 매우 중요함.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적 책임을 가진 근로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 가족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함.
-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할증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음.

#### □ 개정 방향

- 야간근로를 규제하는 방식은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식임.
- 야간근로가 필요한 업무로는 주간과 야간의 업무가 계속될 필요에 근거하여 ① 업무의 공공성으로 인해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료분야), ② 기술적인 문제로 조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장치산업의 분야), ③ 업무의 성격상 야간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경비와 보수, 점점업무

등), ④ 생산수단의 최대한의 유효활동에 의한 부하자본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야간을 활용하는 업종(자동차, 전기 등)이 있음. 또한, 업무의 성격상 야간노동이 필수적이지 않지만 ⑤ 야간에도 공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이윤을 얻는 업종이 있음(24시간 편의점 등).

-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면 앞의 ④, ⑤는 야간근로가 금지되어야 함.

○ 야간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야간근로시간 규제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 야간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의 회수를 제한하고, 근로시간은 주간근로보다 짧게 설정하며 장시간이 될 경우에는 임시 수면시간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배려해서 충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근무와 근무 사이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체력의 회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가정생활을 포함한 사회적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개정안 예시: 근로기준법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54조(야간근로의 제한) 야간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관련이 있어서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2. 대규모의 설비로 일관(一貫)하여 생산하는 장치산업에서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3.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거나 경비 및 보수, 점검하는 등 야간에 중단해서는 안 되는 업무인 경우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인 경우

## 나.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 개정 배경

- 현 정부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공공성 강화는 주요정책이 되지 못한 채,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은 보육료 지원 확충 등의 현금 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민간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보육정책은 비용은 공적으로 지출되지만 민간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공적 통제가 원활하지 못해 투자 대비 효과가 낮고 지원확대가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3월 말 현재 어린이집 총 4만 493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2,156개소이며 시설 대비 비중 5.32%로 가정어린이집 52.31%, 민간 37.35%에 비해 상대적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자치단체별 어린이집 공공성 실태 보고서』, 2012. 6.)
-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해 보육료의 공적 부담 및 서비스 공급량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전달체계의 공공성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음.
-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이용 아동의 이동을 우려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직적인 반대, 지방정부는 지자체 장의 의지부족 및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대, 지역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30%는 되어야 함.

### □ 개정 방향

- ‘영유아보육법’ 개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하도록 의무화.

-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 지자체의 설치 의무 명시.
-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강화 명시.
- 지역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고려한 소규모의 어린이집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부터 우선 설치.

□ 개정안 예시: 영유아보육법

현행법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 개정

□ 개정 배경

-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변화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주부 혹은 어머니의 역할로 가족내 돌봄을 담당하기 어렵게 했고, 돌봄의 위기 혹은 부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으며, 국가는 사회적 재생산 차원에서 ‘돌봄’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이숙진, 2011:50).
- 2008. 7.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겨졌던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어, 전체 노인 인구의 5%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남.

-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마련 이후 서비스 공급기관 부족을 우려하여 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입법화한 결과, 현재 시설과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함.
  - 현재 재가장기요양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재가장기요양 기관으로 지정 의제되며,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 기관설립이 용이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며, 수급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도리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져 사회보장제도라는 공공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데 있음.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대한 법적 명시는 부재함.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전체 14,590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1.5%인 227개소에 불과함.

□ 개정 방향

- 제도 시행 초기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목표로 하였다면, 이제는 과잉공급에 대응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함.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를 허가제로 전환함.
-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금지함.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범위에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장

- 기요양기관 장의 의무 준수 의무를 포함한 평가 결과 공개.
-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도록 함.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외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행위,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장기요양위원회의 기능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명시하고 요양보호사 대표의 참여를 명문화.

□ 개정안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행법	개정안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p> <p>①② (생략)</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p> <p>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p> <p>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p> <p>(신설)</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p> <p>①② (생략)</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을 <u>설립·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u></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관리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p> <p>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p> <p>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p> <p>② 공단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1.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 외의 행위를 <u>강요한 경우</u></p> <p>2. <u>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요원에 부담하게 하는 경우</u></p>



현행법	개정안
<p>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p> <p>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p> <p>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p> <p>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p> <p>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p> <p>②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기준</p> <p>③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p> <p>④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p>	<p>3.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p> <p>4. <u>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u></p> <p>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p> <p>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허가)</p> <p>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u>허가</u>를 받아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u>허가</u>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u>허가</u>한 때 지체 없이 <u>허가</u>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장기요양기관의 허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삭제)</p> <p>④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p> <p>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p>

현행법	개정안
제46조(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이사가장이 추천하는 자 ③, ④. (생략)	③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추가)

### 3.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 □ 개정 배경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경험으로써 그에 대한 선택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 체계상 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만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형법에서 모든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성관계와 피임, 가족관계 전반에서 남성의 결정권이 우선시되고, 임신과 출산이 경력단절, 해고로 직결되며,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또한 커져가는 상황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현실 속에서 실제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와 무관하게 임신중절이 성행하고 있으며 현실과 규범 사이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실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중 합법적 시술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낙태를 형사처벌함으로써 비밀리에 행해지는 낙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여성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여성의 임신,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성관계, 피임, 임신, 임신중절, 출산·양육 전반에 관한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의 재생산권으로 파악하여야 함.
-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절 시술로 내몰리는 현실에 비추어 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권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시술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함.

#### □ 개정 방향

- 현행 모자보건법에는 사회적 허용사유를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낙태의 합리적 수용범주에 사회적 허용사유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지만, 사회적 허용사유의 다양한 범주를 구분하여 입법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됨.
-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 허용이라는 현실적 요청을 반영하여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 방식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부 수용함.
  - 여성의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법익 균형을 고려하여 의학적으로도 태아를 실제 생명체를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이면서, 가장 안전하게 임신중절이 가능한 시기인 임신 12주까지는 임부의 명시적인 의사에 기초한 의사에 의한 시술일 경우 따로 정당화 사유를 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허용함.

- 기한 방식과 정당화 사유 방식을 결합시켜 합리적 임신중절의 범위를 확장.
- 기한 방식에 의해 허용되는 기한을 초과하더라도 모자보건법상의 허용사유에 해당한다면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함.

## □ 개정안 예시: 모자보건법

현행법	개정안
<p>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신설)</p> <p>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li> <li>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li> <li>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li> <li>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li> <li>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p>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 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p>	<p>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p> <p>① 임신 12주 이내인 경우 의사는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한 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p> <p>②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12주를 초과하였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임부가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친족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li> <li>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li> <li>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強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li> <li>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li> <li>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 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 가. 아동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법제화

#### □ 개정 배경

- UN 아동권리협약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무관하게 그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06년 실태조사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녀양육비 이행관련 실태조사에 의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유로 고의 또는 악의적인 의도로 주지 않는 경우가 70% 이상이며, 경제적 무능은 20%이하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방안이 필요함.
-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협의이혼절차의 개선을 통해 이혼숙려기간의 제도화 및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18대 국회에서는 협의이혼과정에서 제출된 자녀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에 집행권을 부여하고, 자녀양육비 청구사건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 및 담보제공명령제도,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도입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양육비지급이행을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의 도입은, 물론 이전의 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성과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비용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가족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때까지의 절차적·시간적·비용적 인내와 노력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비양육친이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양육을 위한 현실적인 양육비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 이와 같이 양육비가 고의나 악의이든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든 실행

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의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양육비가 필요한 아동들로서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고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곤란은 결국 양육부모의 양육포기로 시설에 맡겨지는 등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임.

- 아동을 양육하는 문제는 이제 어느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따라서 아동의 양육비 문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에서 국가가 법적·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OECD 32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18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는 못했지만, 비양육친의 양육비지급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양육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와는 별도로, 아동의 기본 생계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할 제도임.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한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적용대상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양육비 선지급에 관한 규정을 모두 담아내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제정방향

- 비양육부모가 가정법원의 양육비지급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국가에 아동양육비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선지급 후 국가는 비양육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선지급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이 필요함.

## 나. 이주아동의 보호를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

### □ 제정 배경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
- 특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인권과 교육권 의료보장 등에 있어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2003년 1월 UN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 이후 2003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학교입학이 허용되고, 2008년 2월 동 시행령의 재·개정으로 관련 문제가 다소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인권과 차별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
-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2012년 1월 「이주인권가이드라인」을 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주아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사항에 포함하였음.

Ⅲ.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Ⅲ-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Ⅲ-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Ⅲ-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 과정 제공
		Ⅲ-1-4. 이주아동의 개별육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Ⅲ-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Ⅲ-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Ⅲ-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보장	Ⅲ-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Ⅲ-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Ⅲ-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Ⅲ-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Ⅲ-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 □ 제정방향

-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아동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의 법률로서 보호되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의 인권 보호 및 교육권과 의료권의 보장과 지원 근거, 그리고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체류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필요함.

### 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빈곤 심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

#### □ 개정 배경

-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0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추정),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는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 OECD 조사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1%로 OECD 평균의 13.3%의 3.4배에 이르고 있어(더욱이 여성노인가구주의 빈곤율은 56.1%로 남성노인가구주 빈곤율 29.3%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함), 노인빈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액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위와 같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에는 현행법으로는 역부족이며 노인빈곤화를 막을 수 없음.
-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지급권자를 확대하고, 그 지급액수를 인구 노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방향

- 기초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로 증액함.
-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3년 1월 1일 당시 지급자가 65세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확대함.

□ 개정안 예시: 기초노령연금법

현행법	개정안
<p>제5조(연금액)</p> <p>①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부칙 &lt;제8385호, 2007.4.25.&gt;</p> <p>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p> <p>① (생략)</p> <p>② 국가는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하는 때는 지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하고, 2009년 1월 1일 당시 지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p>	<p>제5조(연금액)</p> <p>① -중략- 100분의 10-중략-</p> <p>② (현행과 같음)</p> <p>부칙 &lt;제8385호, 2007.4.25.&gt;</p> <p>제3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중략- 하며, 2013년 1월 1일 당시 지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p>

## 5. 젠더폭력 종식을 위한 입법과제

### 가. 성폭력범죄 처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형법 개정(강간 개념 정비 및 비친고죄화)

#### □ 개정 배경

-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강화되는 형태로 처벌이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처벌 공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함. 그 주된 원인으로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협소한 규정과 해석을 꼽을 수 있음.
- 이에 강간 개념을 재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벌권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을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강간죄의 객체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 그동안 특별법상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는 범죄의 범위는 다소 넓어졌으나, 일반법인 형법상 성폭력범죄(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형법 제3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친고죄로 되어 있음.
- 형법 제306조의 친고죄 조항은 강간죄의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하는 판례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공백을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해자에 의한 합의 강요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성폭력범죄에서의 친고죄 조항 폐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07년, 2011년 2차례에 걸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함.

#### □ 개정 방향

-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범죄에서의 성적 침해행위를 ‘성교-유사성교행위-추행’의 3단계로 구분하며,

행위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 외에 위력을 포함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강간 개념에 비동의간음을 포함하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임.
- 강간 개념을 재정비하면서 사전적 의미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이 맞지 않거나 윤리적 색채를 가진 ‘간음’과 같은 용어(‘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 ‘폭행·협박을 사용한 간음’으로 해석되는 ‘강간’과 같은 용어는 ‘성교’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형법 제306조를 삭제하여 모든 성폭력범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 개정안 예시: 형법

현행법	개정안
제297조(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신설>  <신설>	제297조(강간) 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을 성교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3자의 성교를 수인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성교하도록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7조의2 (정의) ① 본 장에서 “성교” 또는 “강간”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성기·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
형법 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06조(고소) <삭제>

## 나. 성폭력범죄 규정의 체계 정비를 위한 형사 특별법 규정의 형법으로의 통합(제2편 제32장)

### □ 개정 배경

- 현재 성폭력범죄는 기본 형사법인 형법, 특별 형사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음.
-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에 즉각 대처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특별 형사법의 규정을 계속 개정해 온 것이 18대 국회의 입법 경향임.
- 이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원적인 규정 및 특별법 위주의 개정 입법은 성폭력범죄 처벌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 개정 방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 규정을 형법 제2편 제32장으로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성폭력범죄의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2편 제32장의 명칭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기본 유형을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삼고, 성적 침해행위가 추행이 아닌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되는 경우, 행위의 수단이 단순 폭행, 협박, 위력이 아닌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되었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성폭력범죄 규정체계를 정비하여야 함.

□ 개정안 예시: 형법

현행법	개정안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2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
제298조(강제추행)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신설>	제297조(강제추행) 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3자의 추행을 수인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추행을 하도록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7조(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항 신설>	제298조(강간) ① 폭행, 협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을 성교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3자의 성교를 수인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성교하도록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8조의2 (정의) ① 이 장에서 “성교” 또는 “강간”이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성기·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2.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
	제298조의3(정의) 이 장이 규정한 “사람”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형법 제299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통합하여 제299조를 신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 (중강간 등) 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제297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때 2.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때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 4.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범한 때 ② 전항 각호의 방법으로 제298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현행법	개정안
<p>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p> <p>&l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흡수하여 제299조의2 신설&gt;</p> <p>※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p> <p>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p> <p>&l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를 흡수하여 제299조의3 신설&gt;</p> <p>※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p> <p>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p> <p>2.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p>	<p>제299조의2 (친족관계 등에 의한 가중)</p> <p>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97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98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99조(준강간 등)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④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99조(준강간 등)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친족은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거하는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p> <p>제299조의3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등)</p> <p>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97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98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③ 위계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거나 성교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p> <p>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99조(준강간 등)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현행법	개정안
<p>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중간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p> <p>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예에 의한다.</p> <p>&lt;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흡수하여 제299조의4 신설&gt;</p> <p>※ 아청법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p> <p>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li> <li>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li> </ol> <p>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⑤ 위계(偽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lt;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흡수하여 제299조의5 신설&gt;</p>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p> <p>①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p>	<p>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제299조(중간강간 등)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299조의4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등)</p> <p>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297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298조(강간)처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p> <p>③ 위계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하거나 성교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p> <p>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299조(중간강간 등)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299조(중간강간 등)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p> <p>제299조의5 (특수강도강간 등)</p> <p>①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제297조(강제추행) 내지 제299조(중간강간 등)의 죄를 범한</p>

현행법	개정안
<p>(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lt;형법 제302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통합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둬&gt;</p> <p>형법 제302조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p> <p>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li> <li>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li> <li>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li>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li> <li>5.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li>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ol>	<p>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②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제297조(강제추행) 내지 제299조(준강간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0조(장애인에 대한 추행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7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li>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8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li>③ 위계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거나 성교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li> <li>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9조(준강간 등)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li> <li>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99조(준강간 등)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i> </ol>



현행법	개정안
<p>7.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p>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4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4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11.17]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제299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99조의2 제5항, 제299조의3 제5항, 제299조의4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현행법	개정안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2조(미수범)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1조 (단,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01조의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 등) ①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하여 그 보호 또는 감독의 관계를 남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교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교육, 업무, 고용, 종교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보호 또는 감독의 관계를 남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교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교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내지 제14조의2를 형법 제305조의2 내지 제305조의4로 흡수하여 규정을 신설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개정안
<p>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성폭력처벌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카메라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6조(고소)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고소) 제11조 제1항·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p>제305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5조의4 (카메라 등 이용촬영)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306조(고소) 제305조의2, 제305조의3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p>

## 다.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의 변호인’ 제도 확장과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 □ 개정 배경

-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진술을 위하여 2차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 개정 방향

- 2012. 3. 16.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의하여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의 변호인’ 제도(이른바 ‘법률조력인’)가 시행 중임.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자의 경우에도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제도의 시행 추이를 점검한 후 일반 성폭력 피해자 전반에 확대 시행할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 장기적으로, 특히 취약한 성폭력 피해자, 예컨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경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의사소통을 보조하면서 사법절차 참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함.

### □ 개정안 예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	개정안
<신 설>	제29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의 출석권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증거보전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을 가진다.

현행법	개정안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 라. 가정폭력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 □ 개정 배경

-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혼 남녀의 부부폭력율은 53.8%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4년도 44.6%, 2007년도 40.3%였던 것에 비하여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경찰이 가정폭력신고에 대하여 적기에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폭력 피해를 확대시킨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가정폭력에 관한 두 법률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해자 성행 교정 및 처우에 초점을 두게 되어 피해자 안전보호는 가해자 처우를 통한 간접적인 목표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왔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 보호 정책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송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향 또한 지적됨. 또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가 가정폭력범죄의 중대성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가정폭력범죄를 사소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음.

□ 개정 방향

- 단기적으로 2011. 7. 25.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0921호)」에 신설된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으로 퇴거 등의 격리,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명령 또는 수감명령, 배상명령과 부양료지급명령, 공동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함.
- 장기적으로는, 가정폭력 사건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으로 이원화하여 처리하는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체계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지 여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피해자 보호 정책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송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가정폭력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예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	개정안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u>상담명령 또는 수감명령</u> 6. <u>배상명령</u> 7. <u>부양료지급명령</u> 8. <u>공동주거의 인도</u>

## 마. 성매매방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법 개정

### 1) 성판매자 비범죄화와 성매매의 개념 확장

#### □ 개정 배경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쌍방을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성매매알선 구조의 특성을 볼 때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요청됨. 이에 대하여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성거래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을 포함한 성매매 관련 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 개정 방향

- 성구매자와 성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는 금지주의 입법에서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금지주의 입법으로의 전환
- 성매매 개념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성매매 규정을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규정 수준(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거래뿐만 아니라,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까지 포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성적 서비스를 거래함으로써 성을 착취하는 행위 개념으로 성매매 개념을 정립할 것이 요구됨.

□ 개정안 예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현행법	개정안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u>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라. <u>자위행위</u>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성을 사는 행위</u>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현행법	개정안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벌칙) ① <u>성을 사는 행위를 한</u>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성매매알선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일원화

□ 제정 배경

-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서 성매매방지를 위해 형사처벌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행정규제에 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고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행정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임.

□ 제정 방향

- 영업의 형태를 막론하고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한 영업주에 대하여 영업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 다양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제정안 예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sup>7)</sup>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소에 대한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영업소”란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영업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수사항) 영업자(영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사용자·종업원·대리인 그 밖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반사항의 통보) 경찰서장은 영업자가 제4조를 위반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 등) ① 경찰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7) 18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620, 조매숙 의원 등 11인 발의) 참조

제정안
<p>제7조(폐쇄명령 등) ①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② 행정관청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营业을 계속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폐쇄조치) ① 행정관청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li> <li>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li> <li>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li> </ol> <p>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li> </ol> <p>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10조(청문) 행정관청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11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 행정관청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규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2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경찰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소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정안
제13조(벌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태료) ① 제6조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출입·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과 이를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인신매매방지 관련 법 제·개정

### □ 제·개정 배경

-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은 18대 국회 때 정부가 제출한 형법 개정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가 입법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임.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와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요구됨.

### □ 제·개정 방향

- 입법방안으로 형법 제2편 제31장(약취와 유인의 죄)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방안과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 전자의 경우 인신매매 범죄를 일반 형사법으로 규율하는 장점이, 후자의 경우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만들어 통합적인 규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입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자의 방안, 즉 형법에 인신매매죄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제정하여야 함.

- 인신매매범죄 처벌규정을 정비할 때 현행법상 인신매매 범죄(형법 제 288조의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죄, 형법 제292조의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은닉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범죄가 처벌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여,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하여 특히 ‘착취 목적’의 의미, 행위 수단, 피해자의 동의와 무관한 범죄 성립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인신매매 범죄 해석·적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섬세한 구성요건 정비가 필요함.
-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는 체류,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충분한 법적 구제절차의 제공, 귀국 지원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원을 규정하는 입법에 있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이 필요함. 인신매매 범죄 처벌절차(수사 및 기소)와 무관한 체류자격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의 필요와 의사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숙려기간(예컨대 30일 내지 90일)을 위한 임시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숙려기간 후 계속 체류(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음)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일정기간(예컨대 2년)의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그 후 다시 영구 체류나 귀화신청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법절차 참여를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 유형을 마련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에 협력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체류자격을 마련하여야 함. 이때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는 체류자격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제정안 예시: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sup>8)</sup>

제정안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착취”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반의사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반의사 유사 성교행위</li> <li>나.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게 하거나 접촉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li> <li>다. 성적 욕망 또는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나체, 자위행위,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는 행위</li> <li>라.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위 가목부터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li> </ol> </li> <li>2. “강제노동”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사용자의 의지대로 강요하는 행위</li> <li>나.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는 자 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근로하게 하는 행위</li> </ol> </li> <li>3.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걸 등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모집·알선·운반·은닉·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li> <li>나. 성착취, 강제노동, 장기적출, 강제구걸 등 착취를 목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이하 “아동 등”이라고 한다.)를 모집·알선·운반·은닉·인계하거나 인계받는 행위</li> </ol> </li> <li>4. “인신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2조 범죄에 의한 피해자</li> <li>나.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 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li> <li>다. 「아동복지법」 제29조제5호(아동 매매)</li> <li>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li> <li>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li> </ol> </li> </ol>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위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p>

8) 18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027, 이정희 의원 등 10인 발의) 참조

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로조건 및 계약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li> <li>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 결정에 중대한 신상정보를 누락·왜곡·날조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진정한 혼인 의사를 가장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행위</li> <li>3.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취업 및 체류자격 등 경제활동기회를 제공·약속하여 상대방을 유혹하는 행위</li> </ol>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상대방의 공박한 처지 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 항공권 등을 압수 또는 제공받아 반환하지 않는 행위</li> <li>2. 신원보증 철회, 출입국위반사실의 통지 등 체류자격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강제퇴거명령 발부 대상이 되게 하는 행위 또는 이를 행하겠다는 언행</li> <li>3. 수수료·선불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번제를 요구하는 행위</li> </ol> <p>제3조(피해자의 동의 등) ① 인신매매피해자의 동의는 인신매매를 한 자의 범죄행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인신매매 피해의 정도, 수사에 대한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행한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 범죄의 예방과 근절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신매매행위</li> <li>2. 인신매매행위를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li> </ol> <p>제6조(실태조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신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처벌,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고, 인신매매피해자의 인권보장,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신매매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li> <li>2.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li> <li>③ 전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및 업무,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 </ol> <p>제7조(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신매매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제정안
<p>1. 여성가족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고용노동부장관                  4. 보건복지부 장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6.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p> <p>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⑤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원스탑 서비스)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정책협의회 위원인 되는 각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원스탑 서비스 조직을 둘 수 있다.</p> <p>제9조(국제협력) 국가는 인신매매 범죄의 방지 및 처벌과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 공조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p> <p>1. 인신매매 사범의 수사 및 검거와 관련한 국제협력                  2. 인신매매에 관련된 사법제도, 수사기법,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교육, 훈련 및 교류                  3.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국적, 거주 확인 요청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확인 및 회신                  4.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출신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행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여행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                  5. 타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을 경우, 그 정보의 사용에 제한을 요청한다면 그 요청의 수용</p> <p>제10조(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 및 인신매매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을 위한 수사 및 재판 절차, 인신매매피해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p> <p><b>제2장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b></p> <p>제12조(인신매매 등) ①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로의 이송 또는 국내로의 이송을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인신매매행위를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벌한다.</p> <p>1. 인신매매된 자를 폭행·상해·감금·유기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제정안
<p>2. 인신매매를 한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여 인신매매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13조(인신매매의 광고)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광고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4조(상습범) 제12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p> <p>제15조(은닉, 도피) 제12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제16조(미수범) 제1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제17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2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p> <p>제18조(몰수, 추정) 제12조 내지 제13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p> <p>제19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p>② 수사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하에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li> <li>2.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li> <li>3.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li> <li>4. 외국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귀화한 자</li> <li>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li> </ol>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인신매매피해자의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으로 재판이나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p> <p>제20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증인으로 소환 받은 인신매매피해자는 사생활 또는 신변보호를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제정안
<p>제21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長)이나 그 종사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6조에 따른 인신매매피해자종합지원센터</li> <li>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li> <li>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호시설</li> <li>4.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li> <li>5. 「인신보호법」 제2조에 따른 수용시설</li> <li>6. 「출입국관리법」 상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li> <li>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li> </ol> <p>②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b>제3장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b></p>
<p>제22조(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신매매피해자종합지원센터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 또는 인신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p>
<p>제23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인신매매 행위와 관련하여 인신매매피해자에게 발생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의심이 있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의 유인·강요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인신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4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의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등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정안
<p>제25조(생계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피해자가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신매매피해자의 생계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의 지원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6조(인신매매피해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인신매매 피해의 상담, 치료, 보호,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신매매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신매매피해의 신고접수 및 상담, 정보제공</li> <li>2.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li> <li>3.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li> <li>4.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li> <li>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li> <li>6.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li> <li>7. 통역, 체류자격, 수사절차 지원 등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li> <li>8. 피해자 보호 및 숙식의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li> <li>9.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4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b></p> <p>제28조(차별금지) ①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는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 제3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있어서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가 내국인과 차별없이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p> <p>제29조(강제퇴거 유예 등) ①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수사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인신매매피해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情狀)을 고려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 또는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p>

제정안
<p>④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 또는 그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상담시설의 장은 해당 외국인이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국 준비에 필요한 일정 기간 동안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⑤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인신매매범죄 피해로 인한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 중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30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을 인신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수사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등 본 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필요한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1조(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는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신매매관련 수사 및 재판이 종료한 후에도 인신매매피해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의 회복에 필요한 기간 동안 국내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보장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가 인신매매피해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우 귀국 준비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p> <p>④ 인신매매피해자인 외국인이 해당 수사절차 및 형사재판 이외 다른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송 또는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항을 준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체류자격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p> <p>제32조(귀국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의 귀국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해외에서 한국인 인신매매피해자가 발견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외 공관장에게 해당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 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p> <p>③ 법무부장관은 귀국비용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본 조에 따른 지원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6. 성차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가.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 □ 제정배경

- 우리 사회는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된 이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서의 성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으로 이루어진 차별금지 관련 법제가 존재할 뿐임.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실체법이 아닌 조직법으로서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차별을 진정하고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와 기구에 집중된 법률임. 따라서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개념적 정의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범주와 그에 따른 판단기준의 문제를 담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런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실체법으로서의 일반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논의와는 별도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한이 단순히 시정권 고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당부처(법무부와 노동부)에서 시정명령권을 갖는 것으로 입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완하였음.
-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한 입법으로는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과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상의 성차별만을 규율하는 한계가 있음. 성별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모든 영역에 적용한 최초의 개별법으로서의 ‘남녀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 일원화에 따른 법령정비과정에서 2005년에 폐지되었음.
- 2005. 3. 24. ‘남녀차별금지법’이 폐지된 이후, 우리 법제에는 성차별 문제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면서 성별 등을 사유로 행해지는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실체법이 없는 상황임.
- 한편, 매년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 성희롱 관련 법

률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방지 규정,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의 구제에 관한 규정 등으로 분산되어있음. 이처럼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법 집행과 피해자 구제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법의 실효성 확보를 저해 할 가능성도 있음. 또한 현행 성희롱 관련 규정이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존재함.

-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의 발생하는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구제 조치를 강화하여 여성인권을 더 단단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을 위한 실체법적 접근을 하는 법률로서 가칭 ‘성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 □ 제정 방향

- 이 법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에 따라 사회 전반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성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성차별 금지와 예방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성희롱 방지 및 발생 시 조치, 그리고 구제절차를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함.
- 또한 성희롱 당사자 범위확대, 사용자 책임의 확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성희롱 판단기준의 명문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작업거부권의 명문화 등이 명문화 되어야 함.

### 나.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민법 제781조의 개정

#### □ 개정 배경

- 자의 성(姓)과 본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781조는 2005년 민법의 일부 개정 전에는 부성(父姓)의 사용을 강제하고 하고 있었으나, 2005년 민

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부성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되,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05년 개정 전 후의 법조문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개정 전	현행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현행법은 부계성(父系姓)을 강제한 개정 전 민법에서 진일보하여 부부의 선택에 의하여 자녀에게 모의 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마련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여전히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하여 부성원칙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시 협의에 의하여 자녀에게 모의 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선언적이고 전시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여전히 성차별적인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현실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장래 자녀에 대한 계획, 나아가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할 것인지, 진지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하기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생신고 시점에 하게 되므로, 자녀의 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자녀의 출생신고 시점이 되어야 함.

법이 현실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혼인신고 시점에만 유일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외적으로 부여하고 이후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모의 성과 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제한적임.

- 이와 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현실적인 이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현행법은 부성원칙주의를 고수하면서 전시효과만을 가진 예외규정을 둡으로써,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 여전히 부성과 모성을 차별하고, 모성을 부여받은 자의 지위를 여전히 ‘정상적인’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가족의 자로 신분규정을 함으로써, 여전히 법에 의해 부계혈통 우월주의의 편견을 고착시키고 성차별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음.
- 또한 혼인외의 자의 경우에도 부성주의의 원칙에 의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즉 모의 성을 따르는 혼인외의 자녀가 부모의 협의 전에 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인지된 경우 인지된 자녀는 인지 전에 사용하던 성에서 일단 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종래 사용하던 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아야 함.
- 외국의 입법례로서 독일의 경우, 부부의 성(姓)이 같으면(혼인성(姓)이 있는 경우), 그 성이 자녀의 출생성이 되고, 성이 다른 경우(혼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으로 자녀의 성을 설정하고, 1개월 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결정권을 부부 일방에게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독일 민법 제1616조 이하).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항 g호는 “가족성(家族姓) 및 직업을 선

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원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 조항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으며,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모성은 현실적으로 그 이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혼인시점에만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자의 성(姓)에 대하여 진정으로 부부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민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엔협약 조항의 적용에 대하여 유보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임.

-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함에 있어 부부가 협의하여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현행법과 같이 예외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방식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함.

#### □ 개정방향

- 혼인신고시가 아닌 자녀 출생시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다만 부모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개정함.

#### □ 개정안 예시: 민법 개정안

현행법	개정안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모가 협의한 바에 따라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한 결정은 그 이후의 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삭제>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개정안
<p>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p> <p>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의 성은 부모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p> <p>⑥ 현행과 같음</p>

## 7. 성평등 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가. 여성정책 추진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 □ 개정 배경

-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제정 당시의 목적 규정)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이후 14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수립과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성 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 그러나 빠르게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는 여성정책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2005년부터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2009년에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안으로 ‘성평등기본법안’을 발의함. 한편, 여성가족부도 2010년에 위와 같은 이유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안’으로 개정하는 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양 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성평등기본법안’과 ‘여성정책기본법안’은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 변화 발전한 여성정책의 내용과 여성관련 개별법의 발전 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방향

-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 개정 방향으로는 우선, 정책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그동안의 여성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이때 한국적 상황에서는 잠재적 수혜자를 여성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책의 범위와 추진 부서 등이 모호해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그리고 여성정책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 8.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가.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 대표성 관련법 강화 및 확대

□ 개정 배경

- 여성의원비율,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소득격차 등으로 구성되는 성별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109개 나라 중 61위,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생존과 건강, 정치권한부여 등을 통해 남녀격차와 평등 정도를 나

타내는 지수인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는 134개국 중 115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시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능력이 개발되어 왔음에도 그에 걸맞는 정치·사회·경제적 대표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는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의 성평등 축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함.

#### 1) 정치 분야

- 2000년 5.9%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2년 현재 15.7%로 9.8% 증가했으나, 국제의원연맹(IPU)회원국의 평균 19.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10년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중 여성 비율은 2.6%(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없음)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여성 정치인의 증가는 관련법에서 비례대표할당 및 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선출직 여성 공천유도를 위한 여성추천보조금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법제도적인 변화에 기인하지만, 여성의 정치 진출이 주로 비례대표 의석에 치중되어 있고, 지역구 공천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의원 규모의 증가가 담보되기 어려움.
- 현재 정치관계법상의 할당제는 비례대표의 경우만 50% 보장되어 있을 뿐 선출직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의 규정만을 마련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 선출직의 경우에도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등록을 무효화하거나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제재를 수반하는 강화된 입법이 필요함.
- 그 밖에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에 있어서 교호순번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2) 행정 분야

- 2010년 현재 공직 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1.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1년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의 비율은 행정고시 38.8%, 사법고시 37.3%, 외무고시 53.1%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0년 현재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6.3%로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직급별로 여성 공무원의 비중을 보면, 4급은 7.2%, 3급은 4.7%, 고위 공무원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즉, 신규채용이나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있어서 성별격차가 해소되고 있는 면이 있으나 아직 정책결정단계 등 주요 공직자들의 여성참여는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승진, 보직배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증대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지침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 3) 경제활동 분야

- 2010년 기준 여성고용 평균비율과 여성 관리자 평균비율을 보면 민간 부문이 공공분야보다 각각 4.37%p, 6.6%p 더 높게 나타남.
- 그러나 대기업일수록 여성임원 비율이 낮음. 2009년 12월 기준으로 100대 국내 기업 중 근로자 500명 이상인 95개 기업의 고용현황을 보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 여성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중 22.9%를 차지하지만 전체 관리자 비율에서는 7.1%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여성임원은 전체 6,189명 중 69명으로 1.1% 수준임.

## □ 개정 방향

### 1) 정치 분야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 신설.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여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시 여성 1인 이상 의무 공천의 적용 대상에서의 지역 제한 개정(적용대상을 도시지역으로 한정하고, 기초 또는 광역으로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광역의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여성에게 불리).
- 여성추천보조금의 확대.

## 2) 행정 분야

-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제고.
  -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임원 임용 시 성별 균형적 임용조항 추가.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30% 비율 의무화.

## 3) 경제활동 분야

- 노르웨이는 2003년 기업법을 개정해 600여개 이상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권고했고, 2006년 의무사항으로 강화함. 2008년부터 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이나 벌금형도 가능함.
-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대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만, 여성임원에 대한 비율 증대는 현재로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다면 방법이 없음.
- 이에 노르웨이의 법을 참고로 하여 상법의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부분에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한 이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제시: 공직선거법

현행법	개정안
<p>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p> <p>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제49조(후보자 등록 등)</p> <p>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단서 생략)</p> <p>제52조(등록무효)</p> <p>① 후보자 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p> <p>1. (생략)</p> <p>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u></p>	<p>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현행)</p> <p>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u>추천하여야 한다.</u></p> <p>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p> <p>제49조(후보자 등록 등)</p> <p>⑧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단서 생략)</p> <p>제52조(등록무효)</p> <p>① 후보자 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p> <p>1. (생략)</p> <p>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u>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u></p>

## 참고문헌

-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2011). 제49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NGO 현지활동보고 및 토론회. 2011. 9. 21.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2012년도 각 당 총선공약.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구)자유선진당, (구)진보신당.
-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06), '새로마진플랜 2015'
- 국가인권위원회(2012). 이주인권가이드라인. 2012. 1.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8). 제17대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I·II.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2011. 9.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2). 제18대국회 성평등 관련 입법현황 및 향후과제.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0~2012). 「성평등·가족·청소년과 입법」 (제14호-제17호). 2010. 7. - 2012. 1.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8). 「여성과 가족」 (제9호). 2008. 1.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9~2010). 「젠더와 입법」 (제10호-제13호). 2009. 2.-2010. 2.
- 국회입법조사처(2012).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III.
- 김수봉 외(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 외(2007).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철·김연수·김인경(2011). 가구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김유선(201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은지·장혜경·박복순·최인희·서정희(2011). 한부모가족지원 제도·법 체계화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김정호 외 (2009). 200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 김준식(2012). 한국 내 이주 아동 인권 현황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다문화정책의 주요쟁점 및 입법과제 1 자료집.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주최. 2012. 7. 11.
- 김태홍 외(2011).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여성가족부.

- 김혜원(2010).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노동리뷰』 (2010년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2011). 모성보호제도 설계의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자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2012). 2012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 박선영 외(2009). 여성발전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국회여성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선영 외(2011). 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 모성권 보호 강화방안. 보건복지부.
- 박선영 외(2011). 성희롱 관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박선영(201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보호방안-출산휴가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10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여성노동자회.
- 성은미(2010). 비정규근로와 사회보험: 성별·연령별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201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향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양현아(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창비.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이행심의 결과 및 향후 이행방안 설명회. 2011. 12.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자료집 참조.
- 이삼식·최효진·박성재(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승렬(2007).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리뷰』 (2007년 7월호). 제31호.
- 이은영(2011). 여성을 위한 법. 박영사.
- 장지연(2004).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 2001년 ‘모성보호 3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인순(2012). 제18대 국회 성 인지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단상. 2012. 5. 10. 젠더와 입법포럼 발표자료. 한국젠더법학회.
- 최인희(2012). 젠더관점에서 본 노후소득 보장체계: 기초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2012 여름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한국노인의 소득 및 빈곤실태.



보건·복지 Issue&Focus

한국여성단체연합(2012).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2012. 7. 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차기정부 여성정책 10대 과제. 2012. 4. 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Abstract

# Legislative Issues on Women and Family for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Bok-Soon Park  
Seon-Young Park  
Hyo-Jean Song  
Chi-Seon Song  
Hye-Ryeong Ch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elect and propose legislative issues on women and family for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right after its meaningful inauguration.

To this end, the legislative issues that need to be continuously tackled in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rawn up through the analysis and assessment of the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women and family previously dealt with at the 18<sup>th</sup>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has also analyzed the legislative environment of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from the viewpoints of aggravating employment instability and economic inequality, the continuing gender gap, and changes in the family structure

as well as demographic and social changes including low fertility rates and aging, and it presents the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legislative activities for women and family in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In line with the aforementioned legislative directions, this study proposes 21 detailed legislative issues in eight areas on women and family for the 19<sup>th</sup>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employment instability and economic inequality of women; legislative issues for work-family balance and socialization of care work; legislative issues to sec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legislative issues for various family support; legislative issues to eradicate gender violence; legislative issues to rectify gender discrimination; legislative issues to reinforce implementation of policies on gender equality; and legislative issues to expan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2

##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과제**

---

2012년 9월 13일 인쇄

2012년 9월 14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ISBN 978-89-8491-477-3 93330

<정가 9,500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22-70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 3156. 7000 FAX 02. 3156. 7007 <http://www.kwdi.re.kr>



9 788984 914773

ISBN 978-89-8491-477-3